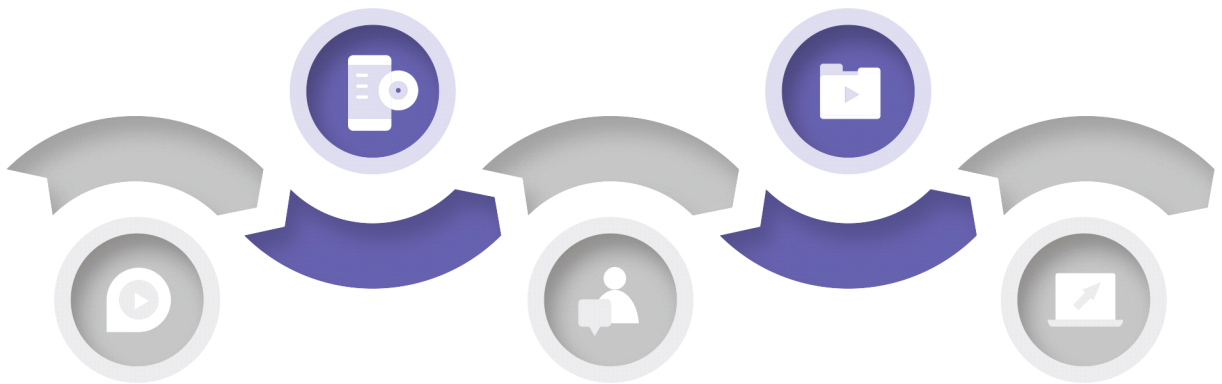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2019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9 Annual Report



제1부 총론

제1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3
제2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7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1장 언론조정	13
제1절 개요	13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13
2. 중재부의 구성	14
제2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4
1. 청구현황	14
2. 청구권별 현황	15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15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16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17
6. 중재부별 접수현황	17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18
제3절 조정사건 처리결과	19
1. 개요	19
2. 피해구제율 현황	20
3. 청구권별 처리결과	20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4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5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7
7. 중재부별 처리결과	28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29
제4절 평가	30



제2장 시정권고	32
제1절 개요	32
제2절 주요 추진실적	33
1.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33
2. 시정권고 현황	34
3. 침해 유형별 분석	34
4. 매체 유형별 분석	42
5. 시정권고시스템 구축	43
제3절 평가	44
제3장 선거기사심의	45
제1절 개요	45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45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46
제2절 주요 추진실적	48
1. 2019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48
2.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실시	51
제3절 평가	52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1장 언론피해 상담	57
제1절 개요	57
제2절 주요 실적	58
1. 상담신청 유형	58
2. 상담 처리결과	58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59
4. 상담매체 유형	59
5. 상담신청인 유형	60
6. 상담대상 유형	60
7. 상담내용 유형	61
제3절 평가	62



목차

제2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63
제1절	개요	6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5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65
	2. 언론인 대상 교육	65
	3. 법조인 대상 교육	67
	4. 대학생 대상 교육	68
	5. 청소년 대상 교육	70
	6. 각급 기관 대상 교육	71
	7. 일반인 연수	72
	8. 교육콘텐츠 개발	73
제3절	평가	73
제3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연구	76
제1절	개요	76
제2절	주요 추진실적	77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77
	2. 토론회 개최	83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88
	4.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실시	89
제3절	평가	89
제4장	이용만족도 조사	91
제1절	개요	91
제2절	주요 조사결과	92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92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95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95
제3절	평가	96



제5장	홍보	98
제1절	개요	98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9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99
	2. 위원회 광고 집행 현황	100
	3.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홍보활동 실시	101
	4. 국민 참여형 홍보 활동 전개	102
	5.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103
	6. 미디어 퍼블리시티 및 사료 관리	104
제3절	평가	105
제6장	기사심의시스템 구축 및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106
제1절	시스템 구축개요	106
	1. 심의시스템 구축	106
	2.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107
제2절	개발 경과 및 성과	107
	1. 심의시스템 구축	107
	2.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108
제3절	평가	109
	1. 심의시스템 구축	109
	2.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110
제7장	기타 주요활동	111
제1절	개요	111
	1.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111
	2. 국제컨퍼런스 협력	113
	3.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115
	4.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115
	5. 혐오 및 차별 표현 배제에 중점을 둔 교육 실시	116
	6. 사회공헌활동	117



제4부 2020년도 업무계획

제1장 2020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123
제2장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127

부록 위원회 업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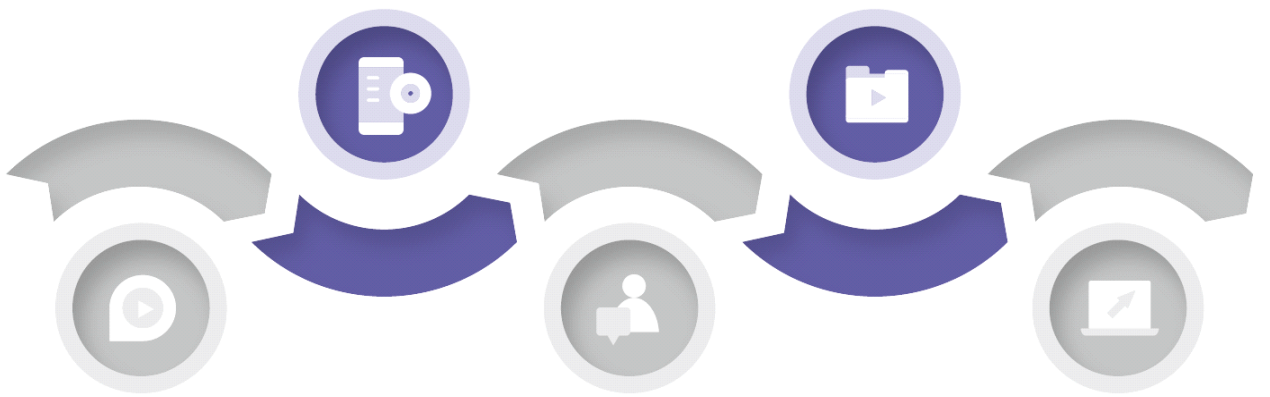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135
2. 설립근거 및 기능	145
3. 연혁	145
4. 기구	147
5. 2019년 예·결산 현황	149
6. 제20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149
7. 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 내용	151
8. 2019년 주요 발간물 목록	152



표목차

표 1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15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15
표 3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16
표 4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16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17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18
표 7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19
표 8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19
표 9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
표 10	청구권별 처리결과	21
표 1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2
표 1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2
표 1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3
표 1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3
표 15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3
표 16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4
표 17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5
표 18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6
표 19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7
표 20	중재부별 처리결과	28
표 2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35
표 2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43
표 23	2019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제재결정 현황	49
표 24	상담신청 유형	58
표 25	상담 처리결과	58
표 26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59
표 27	상담매체 유형	60
표 28	상담신청인 유형	60
표 29	상담대상 유형	61
표 30	상담내용 유형	62
표 31	2019년도 교육 실시현황	64
표 32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65
표 33	<언론인 전문 연수> 실시 현황	66
표 34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 현황	67
표 35	<변호사 연수> 실시 현황	67
표 36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현황	68
표 37	<대학생 연수> 실시 현황	69
표 38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실시 현황	70
표 39	<맞춤형 위탁 연수> 실시 현황	71
표 40	<일반인 연수> 실시 현황	72





제1부 **총론**

제 1 장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성과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로 인한 권리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피해 구제제도를 모색하고, 혐오·차별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 해소방안 마련,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첫째, 위원회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인터넷 기반 미디어로 인한 피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 및 합리적 손해배상액 산정, 언론조정·중재제도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피해구제제도 마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둘째, 위원회는 언론보도가 차별·혐오 발언의 확산 통로가 되어 각종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권고제도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조성을 목표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심의제도 운영>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셋째,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인격권 침해 예방을 위해 언론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반차별적 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연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끝으로 위원회는 업무 관련 전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내부 규정 정비와 사업 운용방식 점검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를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상술한 중점 추진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1.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피해구제제도 마련

- 인터넷상 권리침해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해 ‘열람차단 청구권’의 도입 필요성 및 당위성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인터넷 기반 매체와 관련한 모범 언론피해구제보도문 사례를 발굴 및 활용하는 한편, 원 보도 언론사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피해구제 합의 사항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신청인에게 언론조정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보도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청취지 예문>을 통해 유형별 신청취지 예시를 제공하여 기사의 열람·검색 차단 혹은 펌글·댓글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원하는 신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 기반 미디어로 인한 다양한 권리침해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계간 <언론중재> 등 위원회 학술 발간물 기획을 통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현황과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발의된 「통합방송법」의 쟁점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향후 OTT 법제화 및 위원회 조정대상매체 편입 가능성 등의 변화에 대비하였으며, 유튜브(YouTube)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법적 쟁점 및 피해구제 방안 등을 살펴보기 위해 MBC 충북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인터넷 기반 신(新) 유형 미디어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개선 소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실제 손해배상청구 조정사건 실무에 활용한 결과 2019년 평균 조정액이 전년 대비 상승(2018년 조정액 평균 196만 원 → 2019년 조정액 평균 255만 원)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언론조정대상매체 운영 언론사 법인이 동일할 경우 매체 유형(ex. 종이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상관없이 언론조정신청서를 통합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접수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언론조정신청서 예문의 용어·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언론조정신청서 접수 이후 이메일을 통해 접수 사실 및 이후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등 위원회 언론조정·중재절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심의제도 운영

- 인종·종교·장애·성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 및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차별적 발언 및 혐오표현 등으로 사회적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문제성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을 통하여 차별금지 대상에 ‘국적’, ‘지역’, ‘나이’를 추가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심의제도 운영을 추진하였다.
- 개인적·사회적 법익 보호 강화 및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 조항(「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을 개정하고, ‘뉴스성 기사 제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 제목을 금지하도록 하는 심의기준을 신설(「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하였다.
-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설치·운영 기간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보도 심의의 형평성, 일관성, 효율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적극 개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연구 강화

- 온라인상 차별·혐오표현에 따른 인격권 침해 및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ISP의 책임,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 혐오 등과 관련한 논문을 기획·게재하고, 분기별로 국내·외 언론법제 동향을 수록하였으며,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 학술 발간물 및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온라인상 차별·혐오에 관한 학술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였다.
- 예비법조인 연수, 예비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등 교육 수강자별 교육 프로그램 내에 성(性) 차별 및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포함시켜 교육 수강자들이 각종 사회적 차별 및 혐오표현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소식지, 블로그 등 위원회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한 인물 인터뷰를 게재하고, 사회적 차별 해소 관련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등 차별 해소 및 성(性)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기획 및 홍보 사업을 진행하였다.

4. 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내부 시스템 정비

- 조사관의 조정실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실무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통합한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를 발간하였으며, 언론조정중재 관련 통계 중 시의성이 떨어지는 통계는 삭제하고, 각 통계의 중요도에 따라 갱신 주기를 달리 설정하는 등 언론조정중재 통계 관리 및 작성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 위원회 내부 규정 작성 및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규정 입안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 입안 업무 예규」를 개정하는 등 위원회 규정 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 및 선거기사심의 업무 시 안건 작성부터 심의, 사후 처리, 통계 관리, 기록물 DB화 등 일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심의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사업을 통한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으로 사무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제 2 장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1.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교류협력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미국 뉴욕의 미디어법률자원센터(Media Law Resource Center, MLRC)와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NYT), 워싱턴의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ABA) 등을 방문해 언론분쟁해결과 관련한 미국의 현황 및 국제적 흐름에 대한 정보를 습득·공유하고 세계 유일의 언론분쟁해결 제도인 언론조정·중재절차를 미국 주요 기관에 상세히 소개하였다.
- 해외 유수의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가짜뉴스와 선거’ 등 글로벌 미디어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사업을 활용해 미디어 관련 해외 법제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아시아센터(Asia Centre) 이사장 및 태국 최고행정법원 고위법관단의 위원회 방문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 국제교류협력 및 정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언론조정·중재절차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변론 조력을 위한 조정·중재 자문 변호사단을 구성하였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해 선거보도 심의기구(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간 업무협의회를 개최, 선거보도 심의기구 운용 관련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 및 심의원 역량 강화 추진

- 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를 강화(결정건수 2018년 5건 → 2019년 116건)하였으며, 시정권고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정권고 결정 관련 협조요청 사항에 대한 언론사 수용률 조사를 실시(2019. 10.부터)하였다.
- 시정권고 심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권고 심의시스템 활용 및 시정권고제도 이해 등 관련 전문 교육을 6차례 실시하였다.

3. 교육 대상자 맞춤형 전문 교육 실시

- 언론인 전문연수 및 예비언론인 연수 과정을 신설해 언론인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언론법제, 보도윤리 등을 중점 교육하는 등 교육신청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교육 과정을 개편·운영하였다.
- 시정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선거기사심의와 관련해 후보자, 지자체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및 의결사례를 Q&A 형식으로 작성한 <알기 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교재로 활용하였다.

4. 현재진행형 이슈에 대한 학술·연구 역량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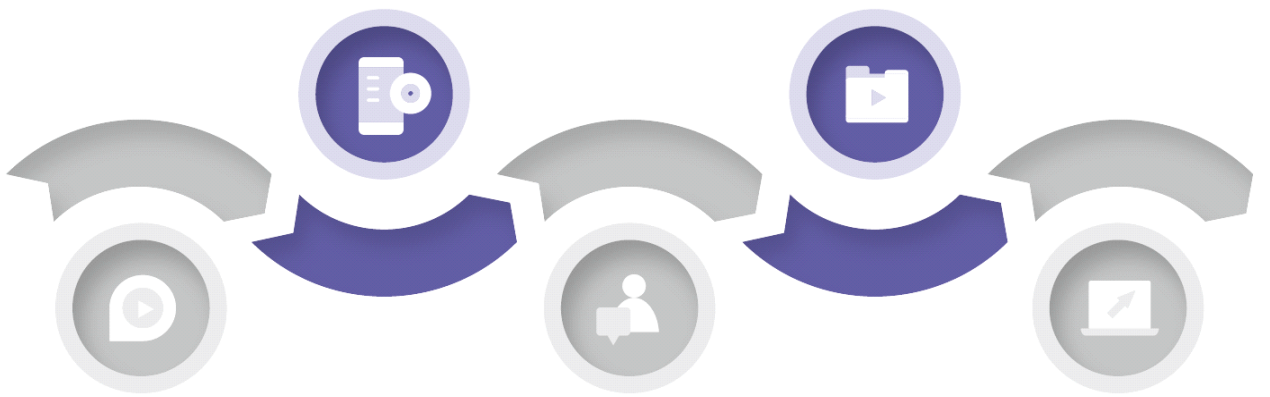
-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페이크뉴스'(fake news)와 관련, 국내·외 페이크뉴스 관련 입법 사례 검토, 독일 및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페이크뉴스 대응책 등을 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및 계간 <언론중재>에 수록하는 등 미디어 분야 현재진행형 이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허위조작정보와 선거보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를 앞두고 선거보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접근, 논의하였다.

5. 모바일 미디어 중심 환경에 부응하는 홍보활동 강화

- 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에서도 위원회 홈페이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를 1만 명 이상 증가시키는 등 위원회 접근성 및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6.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실무 역량 강화 위한 내부교육 실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갑질 문화 등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 위원회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많아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무 관련 교육(법령 제·개정, 계약업무일만 등), 국내 기관 파견교육 등을 통해 사무처 직원의 직무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였다.



제2부 **언론중재위원회
법정사업**

제 1 장

언론조정

제 1 절

개 요

1.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언론분쟁 해결

위원회는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해 명예 및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등 법익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언론(방송,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보도 또는 그 매개(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재부는 중립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연간 조정사건 처리건수는 1981년 설립 당시에는 44건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3,544건으로 80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조정사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6년 1천 건을 돌파(1,087건)했고,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2009년에는 1,57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천 건(2,205건), 2015년에는 3천 건(3,319건 / 세월호 관련 대량신청건 제외)을 넘어섰다. 아울러 조정사건의 매체유형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 대상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조정건수의 약 70% 중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사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또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인격권 침해 및 피해구제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이 기사의 주요 유통경로가 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70%를 전후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정제도 자체가 승패가 갈리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원만히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위원회 각 중재부가 언론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조정 이외에도 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중재 역시 법원을 통한 소송과 달리 비용 없이 신속·간편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조정과 유사하다. 다만, 중재는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사전 합의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중재부의 중재결정을 통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차이가 있다.

2. 중재부의 구성

위원회는 총 18개(서울 8개, 지역 10개)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는 현직 법관을 포함하여 변호사,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전직 언론인, 그리고 언론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2 절

조정사건 청구현황

1. 청구현황

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3,54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최근 위원회 조정 신청건수는 지속적으로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 최근 3년간 조정청구현황

(2017. 1. 1. ~ 2019. 12. 31.)

구 분 \ 연 도	2017	2018	2019
청 구 건 수	3,230	3,562	3,544

2. 청구권별 현황

2019년에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623건 (45.8%), 손해배상청구 1,263건 (35.6%), 반론보도청구 506건 (14.3%), 추후보도청구 152건 (4.3%)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손해배상청구비율이 5.4%p 상승했고, 반론보도청구 비율도 2.5%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2 |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7. 1. 1. ~ 2019. 12. 31.)

청구명 \ 연 도	2017	2018	2019	합 계
정 정	1,557 (48.2)	1,781 (50.0)	1,623 (45.8)	4,961 (48.0)
반 론	362 (11.2)	419 (11.8)	506 (14.3)	1,287 (12.5)
추 후	194 (6.0)	287 (8.1)	152 (4.3)	633 (6.1)
손 배	1,117 (34.6)	1,075 (30.2)	1,263 (35.6)	3,455 (33.4)
계	3,230 (100)	3,562 (100)	3,544 (100)	10,336 (100)

* () 안의 숫자는 %

3. 매체 유형별 청구현황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2019년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 대상 청구건수가 2,055건으로 전체 매체 유형 가운데 58.0%를 차지하였고, 이어 신문 462건 (13.1%), 방송 436건 (12.3%), 인터넷뉴스서비스 388건 (11.0%), 뉴스통신 187건 (5.3%)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뉴스서비스, IPTV)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의 비중은 2017년 76.3%, 2018년 77.4%, 2019년 74.2%로 전체 신청 대상 매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은 2019년 12.3%를 차지하여 전년도와 비교해 3%p 상승했으며, 신문은 2018년 대비 0.4%p 소폭 상승하였다.

표 3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7. 1. 1. ~ 2019. 12. 31.)

매체유형 \ 연 도		2017	2018	2019	합 계
신문	일간신문	261 (8.1)	306 (8.6)	357 (10.1)	924 (8.9)
	주간신문	119 (3.7)	145 (4.1)	105 (3.0)	369 (3.6)
방 송		361 (11.2)	331 (9.3)	436 (12.3)	1,128 (10.9)
잡 지		23 (0.7)	19 (0.5)	12 (0.3)	54 (0.5)
뉴스통신		206 (6.4)	192 (5.4)	187 (5.3)	585 (5.7)
인터넷신문		1,842 (57.0)	2,141 (60.1)	2,055 (58.0)	6,038 (58.4)
IPTV			2 (0.1)		2 (0.0)
인터넷뉴스서비스		416 (12.9)	421 (11.8)	388 (11.0)	1,225 (11.9)
기 타		2 (0.1)	5 (0.1)	4 (0.1)	11 (0.1)
계		3,230 (100)	3,562 (100)	3,544 (100)	10,336 (100)

* () 안의 숫자는 %

4.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

침해 유형별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3,478건(98.1%)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가 28건(0.8%)으로 뒤를 이었으며, 재산상 손해가 15건(0.4%), 성명권 침해가 7건(0.2%), 사생활 침해와 음성권 침해가 각 5건(0.1%), 기타가 6건(0.2%)이었다.

표 4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7. 1. 1. ~ 2019. 12. 31.)

침해유형 \ 연 도	2017	2018	2019	합 계
명예훼손	3,060 (94.7)	3,451 (96.9)	3,478 (98.1)	9,989 (96.6)
초상권 침해	105 (3.3)	59 (1.7)	28 (0.8)	192 (1.9)
음성권 침해	4 (0.1)	2 (0.1)	5 (0.1)	11 (0.1)
성명권 침해	18 (0.6)	19 (0.5)	7 (0.2)	44 (0.4)
사생활 침해	8 (0.2)	6 (0.2)	5 (0.1)	19 (0.2)
재산상 손해	8 (0.2)	18 (0.5)	15 (0.4)	41 (0.4)
기 타	27 (0.8)	7 (0.2)	6 (0.2)	40 (0.4)
계	3,230 (100)	3,562 (100)	3,544 (100)	10,336 (100)

* () 안의 숫자는 %

5.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

2019년 신청인 유형별 청구현황으로는 개인에 의한 청구가 1,934건(54.6%)으로 전체 조정청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기업체 578건(16.3%), 일반단체 532건(15.0%), 지자체 124건(3.5%), 공공단체 117건(3.3%), 언론사와 교육기관 각 74건(각 2.1%)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기업체 및 일반단체의 조정건수가 상당히 증가했고 공공단체, 언론사의 조정건수도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개인과 종교단체의 조정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7. 1. 1. ~ 2019. 12. 31.)

신청인 \ 연 도	2017	2018	2019	합계
개 인	2,077 (64.3)	2,091 (58.7)	1,934 (54.6)	6,102 (59.0)
국가기관	64 (2.0)	68 (1.9)	66 (1.9)	198 (1.9)
지 자 체	144 (4.5)	137 (3.8)	124 (3.5)	405 (3.9)
공공단체	54 (1.7)	103 (2.9)	117 (3.3)	274 (2.7)
일반단체	246 (7.6)	499 (14.0)	532 (15.0)	1,277 (12.4)
종교단체	57 (1.8)	86 (2.4)	45 (1.3)	188 (1.8)
기 업 체	424 (13.1)	442 (12.4)	578 (16.3)	1,444 (14.0)
언 론 사	71 (2.2)	61 (1.7)	74 (2.1)	206 (2.0)
교육기관	93 (2.9)	75 (2.1)	74 (2.1)	242 (2.3)
계	3,230 (100)	3,562 (100)	3,544 (100)	10,336 (100)

* () 안의 숫자는 %

6.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9년 조정사건을 중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 조정건수 3,544건 중 서울 8개 중재부가 2,591건(73.1%)을, 지역 10개 중재부가 953건(26.9%)을 접수·처리하였다. 10개 지역중재부 가운데는 경기중재부의 접수·처리건수가 281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중재부 113건(3.2%), 대전중재부 102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접수현황

(2017. 1. 1. ~ 2019. 12. 31.)

연도 중재부	2017	2018	2019	합계
서울중재부	2,371 (73.4)	2,580 (72.4)	2,591 (73.1)	7,542 (73.0)
부산중재부	54 (1.7)	71 (2.0)	75 (2.1)	200 (1.9)
대구중재부	114 (3.5)	118 (3.3)	113 (3.2)	345 (3.3)
광주중재부	82 (2.5)	113 (3.2)	85 (2.4)	280 (2.7)
대전중재부	71 (2.2)	78 (2.2)	102 (2.9)	251 (2.4)
경기중재부	343 (10.6)	275 (7.7)	281 (7.9)	899 (8.7)
강원중재부	29 (0.9)	19 (0.5)	79 (2.2)	127 (1.2)
충북중재부	42 (1.3)	75 (2.1)	46 (1.3)	163 (1.6)
전북중재부	68 (2.1)	94 (2.6)	62 (1.8)	224 (2.2)
경남중재부	41 (1.3)	89 (2.5)	93 (2.6)	223 (2.2)
제주중재부	15 (0.5)	50 (1.4)	17 (0.5)	82 (0.8)
계	3,230 (100)	3,562 (100)	3,544 (100)	10,336 (100)

* () 안의 숫자는 %

7.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접수 방법별로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조정사건 접수건수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접수 방법별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접수가 3,112건(87.8%)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문서를 통한 접수가 246건(7.0%), 오프라인 방식의 방문 접수 131건(3.7%), 우편 접수 55건(1.6%) 순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 전자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접수 비중이 감소(2018년 760건, 21.3% → 2019년 246건, 7.0%)한 것은 위원회 전자신청시스템 개선작업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전자문서에 의한 조정신청이 불가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자우편 및 전자문서를 통한 사건접수 비율은 2017년 91.6%, 2018년 91.9%, 2019년 94.8%를 기록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접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 최근 3년간 접수 방법별 청구현황

(2017. 1. 1. ~ 2019. 12. 31.)

연도	구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계
2017		189 (5.9)	74 (2.3)	2,236 (69.2)	725 (22.4)	6 (0.2)	3,230 (100)
2018		207 (5.8)	79 (2.2)	2,513 (70.6)	760 (21.3)	3 (0.1)	3,562 (100)
2019		131 (3.7)	55 (1.6)	3,112 (87.8)	246 (7.0)		3,544 (100)

* () 안의 숫자는 %

제 3 절 / 조정사건 처리결과

1. 개요

2019년 조정사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1,129건(31.9%), 취하 1,116건(31.5%), 조정불성립결정 734건(20.7%), 기각 279건(7.9%), 직권조정결정 221건(6.2%), 각하 65건(1.8%) 순이었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정이 성립된 건 외에도 직권조정결정 후 양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신청인의 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심리 전후로 신청이 취하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취하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116건의 조정사건 중 932건(26.3%)은 조정심리 전후에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통해 보도가 게재되거나 손해배상액 지급이 약속 또는 이행되어 신청인의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7. 1. 1. ~ 2019. 12. 31.)

연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피해구제율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17	3,230	915	72	61	488(6)	122	86	1,234	252	73.7%
	%	28.3	2.2	1.9	15.1	3.8	2.7	38.2	7.8	
2018	3,562	1,081	111	89(7)	645(8)	88	12	1,264	272	71.4%
	%	30.3	3.1	2.5	18.1	2.5	0.3	35.5	7.6	
2019	3,544	1,129	121	100(6)	734(26)	279	65	932	184	69.2%
	%	31.9	3.4	2.8	20.7	7.9	1.8	26.3	5.2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된 건수

$$\text{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2. 피해구제율 현황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비율을 말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직권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확정된 사건, 조정 불성립결정 또는 취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구제가 된 사건 등을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2019년 피해구제율은 69.2%로 2018년 피해구제율(71.4%)에 비해 2.2%p 하락하였다. 전년도 대비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이 늘어난 반면 피해구제건수는 다소 줄어들어 피해구제율에 소폭 변화가 있었으나,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은 매년 약 70% 전후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9 |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7. 1. 1. ~ 2019. 12. 31.)

구분 연도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17	3,230	208	3,022	2,227	73.7%
2018	3,562	100	3,462	2,471	71.4%
2019	3,544	344	3,200	2,214	69.2%

3. 청구권별 처리결과

가. 개요

각 청구권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34.5%, 반론보도청구 33.4%, 추후보도청구 7.9%, 손해배상청구 30.7%로, 2018년(정정보도청구 32.6%, 반론보도청구 35.3%, 추후보도청구 8.0%, 손해배상청구 30.6%)과 비교해 정정보도청구 조정성립률은 상승한 데 반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조정성립률은 소폭 하락하였다.

표 10 |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정정	1,623 (100)	560 (34.5)	108 (6.7)	367 (22.6)	112 (6.9)	11 (0.7)	368 (22.7)	97 (6.0)
반론	506 (100)	169 (33.4)	29 (5.7)	95 (18.8)	72 (14.2)	12 (2.4)	113 (22.3)	16 (3.2)
추후	152 (100)	12 (7.9)	3 (2.0)	6 (3.9)	1 (0.7)	18 (11.8)	112 (73.7)	
손배	1,263 (100)	388 (30.7)	81 (6.4)	266 (21.1)	94 (7.4)	24 (1.9)	339 (26.8)	71 (5.6)
계	3,544 (100)	1,129 (31.9)	221 (6.2)	734 (20.7)	279 (7.9)	65 (1.8)	932 (26.3)	184 (5.2)

* () 안의 숫자는 %

사 례 | 정정보도, 손해배상

A언론사는 신청인이 SNS에 게재한 사진을 캡처하여 신청인이 여행금지국가에 다녀온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국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기 이전에 여행을 다녀왔음에도, A언론사가 신청인의 SNS 사진을 동의 없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A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의 SNS 화면이 인용된 부분을 삭제하며,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례 | 반론보도

B언론사는 신청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형사사건에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이를 일반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B언론사가 신청인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추후보도

C언론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간부인 신청인이 교도소 특별면회 알선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C언론사가 추후보도를 방송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손해배상 1

D언론사는 신청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동의 없이 캡처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실명과 초상을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D언론사가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 기사의 열람과 검색을 차단하였고, 손해배상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례 | 손해배상 2

E연론사는 성형시술 부작용 논란을 보도하며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간판을 노출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해당 논란과 관련이 없고, 해당 시술도 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E연론사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간판이 노출된 부분을 방송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하고, 손해배상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1) 처리현황

2019년 손해배상청구 1,263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 388건(30.7%), 직권조정결정 81건(6.4%), 조정불성립결정 266건(21.1%), 기각 94건(7.4%), 각하 24건(1.9%), 취하 410건(32.4%) 등으로 나타났다.

표 11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7. 1. 1. ~ 2019.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2017	1,117 (100)	306 (27.4)	24 (2.1)	16 (1.4)	200[2] (17.9)	34 (3.0)	29 (2.6)	421 (37.7)	87 (7.8)
2018	1,075 (100)	329 (30.6)	42 (3.9)	23[3] (2.1)	256[4] (23.8)	31 (2.9)	4 (0.4)	306 (28.5)	84 (7.8)
2019	1,263 (100)	388 (30.7)	37 (2.9)	44[3] (3.5)	266[14] (21.1)	94 (7.4)	24 (1.9)	339 (26.8)	71 (5.6)

*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1,263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가운데 실제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53건 (4.2%)이지만, 금전배상을 포함하여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조정대상기사 열람·차단 등 금전배상 외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된 경우를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된 조정 사건수는 781건(61.8%)이었다.

표 12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017. 1. 1. ~ 2019. 12. 31.)

연 도	청구건수	금전배상 인용건수	인용률(%)
2017	1,117	83	7.4%
2018	1,075	59	5.5%
2019	1,263	53	4.2%

2) 청구액 및 조정액

손해배상청구 최고액은 100억 원, 최저액은 10만 원이었으며, 조정 최고액은 1억 원, 최저액은 15만 원이었다. 다만, 조정 최고액은 피신청인이 조정심리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간주된 조정사건으로 인한 금액이며, 양 당사자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손해배상청구 조정 최고액은 1,500만 원이었다.

한편, 조정액 평균은 480여만 원으로 작년 190여만 원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으며, 합의 간주된 조정사건의 최고 조정액(1억 원) 사건을 제외하고도 평균 조정액이 약 255만 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을 침해유형별로 구분해보면 명예훼손이 40건(75.4%), 초상권이 11건(20.7%)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13 |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17. 1. 1. ~ 2019. 12. 31. / 단위: 원)

연 도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7		0 ²⁾	10,800,000,000	112,446,512	20,000,000
2018		1,000	10,000,000,000	90,317,695	15,000,000
2019		100,000	10,000,000,000	149,966,481	20,000,000

표 14 |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7. 1. 1. ~ 2019. 12. 31. / 단위: 원)

연 도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7		100,000	10,000,000	1,369,737	1,000,000
2018		250,000	9,000,000	1,960,417	1,000,000
2019		150,000	100,000,000 ³⁾	4,817,442	2,000,000

표 15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9. 1. 1. ~ 2019. 12. 31. / 단위: 원)

침해유형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40	200,000	100,000,000	6,100,000	2,000,000	3,000,000
초상권 침해		11	200,000	3,000,000	1,255,556	1,000,000	1,000,000
성명권 침해		1	500,000	500,000	500,000	500,000	
기타		1	150,000	150,000	150,000	150,000	

2) 2017서울조정21682169 사건: 배상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으로 신청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피해구제가 되는 날까지 매일 1원씩을 산정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정심리에 2회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됨

3) 피신청인이 조정심리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원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간주된 조정사건(2019서울조정1152)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9년 전체 손해배상청구 1,263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1,212건(9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 27건(2.1%), 재산상 손해 7건(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청구된 1,212건 중 40건(3.3%)만이 금액 지급을 전제로 조정성립 또는 취하되거나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초상권 침해 사건은 전체 27건 중 11건(40.7%)이 손해배상으로 인용되어 권리침해 여부가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초상권 침해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1,212 (100.0)	374 (30.9)	78 (6.4)	254 (21.0)	92 (7.6)	24 (2.0)	324 (26.7)	66 (5.4)
초상권 침해	27 (100.0)	6 (22.2)	3 (11.1)	4 (14.8)	2 (7.4)		10 (37.0)	2 (7.4)
음성권 침해	4 (100.0)	1 (25.0)		3 (75.0)				
성명권 침해	6 (100.0)	4 (66.7)		1 (16.7)			1 (16.7)	
사생활 침해	5 (100.0)	1 (20.0)		1 (20.0)			3 (60.0)	
재산상 손해	7 (100.0)	2 (28.6)		3 (42.9)				2 (28.6)
기타	2 (100.0)						1 (50.0)	1 (50.0)
계	1,263 (100.0)	388 (30.7)	81 (6.4)	266 (21.1)	94 (7.4)	24 (1.9)	339 (26.8)	71 (5.6)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주간신문(57.1%), 일간신문(46.5%), 방송(3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하된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화해에 따라 피해구제된 비율은 인터넷신문(33.2%), 인터넷뉴스서비스(24.5%), 뉴스통신(2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조정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에 대해서는 보도계재나 손해배상 이외에 신속한 피해구제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이 매체 특성을 감안한 즉각적인 기사 수정이나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의 방식으로 피해구제에 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17 |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매체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취하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구제	미구제
신 문	일간 신문	357 (100.0)	166 (46.5)	20 (5.6)	74 (20.7)	12 (3.4)	3 (0.8)	59 (16.5)	23 (6.4)	
	주간 신문	105 (100.0)	60 (57.1)	2 (1.9)	19 (18.1)	1 (1.0)	3 (2.9)	12 (11.4)	8 (7.6)	
방 송		436 (100.0)	166 (38.1)	31 (7.1)	122 (28.0)	42 (9.6)	6 (1.4)	39 (8.9)	30 (6.9)	
잡 지		12 (100.0)	4 (33.3)	3 (25.0)	3 (25.0)	1 (8.3)		1 (8.3)		
뉴스통신		187 (100.0)	46 (24.6)	22 (11.8)	38 (20.3)	21 (11.2)	7 (3.7)	43 (23.0)	10 (5.3)	
인터넷신문		2,055 (100.0)	580 (28.2)	117 (5.7)	384 (18.7)	157 (7.6)	46 (2.2)	683 (33.2)	88 (4.3)	
인터넷 뉴스서비스		388 (100.0)	107 (27.6)	26 (6.7)	90 (23.2)	45 (11.6)		95 (24.5)	25 (6.4)	
기 타		4 (100.0)			4 (100.0)					
계		3,544 (100.0)	1,129 (31.9)	221 (6.2)	734 (20.7)	279 (7.9)	65 (1.8)	932 (26.3)	184 (5.2)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 손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순으로 신청건수가 많았다. 가장 많은 침해 유형으로 접수처리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전체 3,478건 중 조정성립으로 처리된 것이 1,111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하로 종결된 건이 1,092건(31.4%)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세분화해 보면 피해구제여부가 확인된 취하 건이 915건(26.3%), 피해구제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청구를 취하 건이 177건(5.1%)이었다. 그밖에 조정불성립

결정 719건(20.7%), 직권조정결정 218건(6.3%) 순으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조정신청한 사건이 처리되었다. 한편 성명권 침해를 주장하며 조정 신청된 사건은 7건 가운데 4건이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되었다.

표 18 |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취하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구제	미구제	
명예훼손	3,478 (100)	1,111 (31.9)	218 (6.3)	719 (20.7)	273 (7.8)	65 (1.9)	915 (26.3)	177 (5.1)	
초상권 침해	28 (100)	6 (21.4)	3 (10.7)	4 (14.3)	2 (7.1)		11 (39.3)	2 (7.1)	
음성권 침해	5 (100)	2 (40.0)		3 (60.0)					
성명권 침해	7 (100)	4 (57.1)		1 (14.3)			2 (28.6)		
사생활 침해	5 (100)	1 (20.0)		1 (20.0)			3 (60.0)		
재산상 손해	15 (100)	4 (26.7)		6 (40.0)	1 (6.7)			4 (26.7)	
기 타	6 (100)	1 (16.7)			3 (50.0)		1 (16.7)	1 (16.7)	
계	3,544 (100)	1,129 (31.9)	221 (6.2)	734 (20.7)	279 (7.9)	65 (1.8)	932 (26.3)	184 (5.2)	

* () 안의 숫자는 %

사 례 | 명예훼손

F언론사는 국가대표 스포츠팀 주치의가 선수의 부상을 오진하고 의무기록을 외부로 반출하여 진단을 의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해당 주치의는 보도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파산청인의 보도 내용이 허위이며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F언론사가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직권으로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례 | 초상권 침해

G언론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관계자들이 대체복무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는 주석을 달고 군인 2명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였다. 이에 해당 군인들은 단순히 인근 군 사설에 근무 중이었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와 아무런 업무적 관련이 없는데도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G언론사가 해당 보도 및 포털 등에 매개된 보도에 게시된 신청인들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신청인들에게 각 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직권으로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를 보면, 개인이 청구한 1,934건 중 585건(30.2%)이 보도 게재,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으로 피해구제되어 취하되었고, 499건(25.8%)이 조정 성립, 370건(19.1%)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조정성립률은 국가기관(53.0%), 지자체(42.7%), 일반단체(42.5%), 공공단체(41.0%), 교육기관(40.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기관은 3년 연속 조정성립률이 가장 높은 신청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종교단체(46.7%), 언론사(4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단체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13.7%로 2018년 38.8%에 비하여 대폭 낮아졌다.

표 19 |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신청인유형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개 인	1,934 (100)	499 (25.8)	125 (6.5)	370 (19.1)	208 (10.8)	44 (2.3)	585 (30.2)	103 (5.3)
국가기관	66 (100)	35 (53.0)	8 (12.1)	8 (12.1)	1 (1.5)		14 (21.2)	
지자체	124 (100)	53 (42.7)	17 (13.7)	14 (11.3)	3 (2.4)		29 (23.4)	8 (6.5)
공공단체	117 (100)	48 (41.0)	14 (12.0)	16 (13.7)			29 (24.8)	10 (8.5)
일반단체	532 (100)	226 (42.5)	28 (5.3)	137 (25.8)	35 (6.6)	9 (1.7)	73 (13.7)	24 (4.5)
종교단체	45 (100)	11 (24.4)	4 (8.9)	21 (46.7)	4 (8.9)		5 (11.1)	
기업체	578 (100)	202 (34.9)	20 (3.5)	120 (20.8)	23 (4.0)	6 (1.0)	179 (31.0)	28 (4.8)
언론사	74 (100)	25 (33.8)		32 (43.2)	5 (6.8)	1 (1.4)	11 (14.9)	
교육기관	74 (100)	30 (40.5)	5 (6.8)	16 (21.6)		5 (6.8)	7 (9.5)	11 (14.9)
계	3,544 (100.0)	1,129 (31.9)	221 (6.2)	734 (20.7)	279 (7.9)	65 (1.8)	932 (26.3)	184 (5.2)

* () 안의 숫자는 %

7. 중재부별 처리결과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73.1%(2,591건)를 처리한 서울중재부에서는 761건(29.4%)이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되었고, 656건(25.3%)은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572건(22.1%)에 대해서는 조정불성립결정이 내려졌으며,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비율은 10.0%로 작년(2.8%)의 약 3.6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지역중재부(전체 사건의 26.9%, 총 953건)의 경우 368건(38.6%)이 조정성립, 276건(29.0%)이 피해구제를 이유로 한 취하, 162건(17.0%)은 조정불성립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직권조정결정은 서울중재부 184건(서울중재부 사건의 7.1%), 지역중재부 37건(지역중재부 사건의 3.9%)으로 서울중재부가 지역중재부 보다 약 1.8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0 |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9. 1. 1. ~ 2019. 12. 31.)

중재부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구제	미구제
서울	2,591 (100)	761 (29.4)	184 (7.1)	572 (22.1)	259 (10.0)	51 (2.0)	656 (25.3)	108 (4.2)
부산	75 (100)	16 (21.3)		24 (32.0)	1 (1.3)	3 (4.0)	30 (40.0)	1 (1.3)
대구	113 (100)	52 (46.0)		12 (10.6)	2 (1.8)		37 (32.7)	10 (8.8)
광주	85 (100)	44 (51.8)	1 (1.2)	18 (21.2)		6 (7.1)	11 (12.9)	5 (5.9)
대전	102 (100)	34 (33.3)	3 (2.9)	14 (13.7)			33 (32.4)	18 (17.6)
경기	281 (100)	118 (42.0)	14 (5.0)	48 (17.1)	10 (3.6)	4 (1.4)	85 (30.2)	2 (0.7)
강원	79 (100)	33 (41.8)		24 (30.4)			17 (21.5)	5 (6.3)
충북	46 (100)	21 (45.7)	1 (2.2)	5 (10.9)	1 (2.2)	1 (2.2)	7 (15.2)	10 (21.7)
전북	62 (100)	8 (12.9)	12 (19.4)	6 (9.7)			33 (53.2)	3 (4.8)
경남	93 (100)	39 (41.9)	1 (1.1)	9 (9.7)	6 (6.5)		20 (21.5)	18 (19.4)
제주	17 (100)	3 (17.6)	5 (29.4)	2 (11.8)			3 (17.6)	4 (23.5)
계	3,544 (100.0)	1,129 (31.9)	221 (6.2)	734 (20.7)	279 (7.9)	65 (1.8)	932 (26.3)	184 (5.2)

* () 안의 숫자는 %

8. 디지털 미디어 피해구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소셜미디어 이용의 증가는 뉴스 생산 및 유통, 소비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언론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는 ‘온라인 퍼스트’ 전략을 펼치면서 텍스트 위주의 1차원적인 기사를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재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사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변화된 뉴스를 실어 나르는 동안 권리침해적 보도의 전파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전파 범위 역시 확대되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조정·중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이 중요한 뉴스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이들을 통해 전달되는 권리침해적 뉴스에 대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린 조정대상기사보다는 수천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동영상과 이에 따르는 악성 댓글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회는 현행 언론중재법의 테두리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를 전제로 포괄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만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조정 사건 양 당사자가 보도하기로 합의한 정정보도문 등의 내용 혹은 기사 열람·검색차단 등으로 합의한 결과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언론사가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수록 기존의 피해구제 수단으로는 필요충분하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례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비롯되는 권리침해적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열람차단청구권과 같은 인터넷 특성을 반영한 피해구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 례 | 기사 확산에 따른 피해의 구제 사례 1

H언론사는 과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보도된 뉴스통신사의 보도사진을 몇 년 후 자사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사용해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신청 직후 H언론사는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삭제하였고, 이후 심리에서 중재부는 손해배상금 20만 원 지급과 함께 향후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등에 신청인 초상이 게재된 경우 H언론사가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등에게 신청인 초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작권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 례 | 기사 확산에 따른 피해의 구제 사례 2

언론사는 신청인 회사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토지 등이 6천억 원에 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속여 아파트를 불법 준공하는 등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심리결과, 언론사는 기사 제목을 수정하고 반론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 도입부에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제 4 절

평 가

2019년 위원회는 총 3,54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최근 5년간 다수매체를 상대로 한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기준 조정사건은 2015년 3,319건, 2016년 3,170건, 2017년 3,230건, 2018년 3,562건, 2019년 3,544건으로 매년 3천 건 이상을 접수·처리하였다. 2019년 전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69.2%로 나타났다.

최근 미디어 환경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의 증가와 더불어 페이스북과 같은 SNS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동영상 플랫폼 등이 뉴스 유통 및 소비의 주된 플랫폼으로 부각되는 등 디지털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였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위원회의 조정사건 접수·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처리한 조정사건 3,544건 중 2,630건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인터넷 뉴스서비스, IPTV)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며, 그 비중은 2017년 76.3%, 2018년 77.4%, 2019년 74.2%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맞물려 최근에는 블로그로 전파된 언론보도나 기사의 댓글로 인한 피해,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신(新) 유형 미디어를 통한 뉴스 유통과 관련해서도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펴글이나 댓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통되는 뉴스로 인한 권리 침해적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행 언론중재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원회는 블로그 등에 복제된 기사나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 등 언론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유형이나 잘못된 기사가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에 대하여도 조정 심리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더 이상 열람이나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조정사건의 피해구제보도문(정정이나 반론보도 등) 작성 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언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도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상의 권리침해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 발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2019년 조정신청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약 18일로 전년에 비해 다소 단축되었으나 여전히 법정처리기한인 14일을 넘기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중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타 지역으로 이동해 조정심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중재위원 정수를 증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발의(김영주 의원 대표발의)되어 있는 만큼, 위원회는 신속하고 간편한 언론분쟁 해결이라는 언론중재법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중재위원 정원 증원 및 중재부 증설 등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 2 장

시 정 권 고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등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시정권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정권고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침해 사항 후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적 조치로,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법익침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만 시정권고 대상 기사가 인터넷으로 보도된 경우 위원회는 법익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이 향후 지속적인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언론사에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 2 절

주요 추진실적

1.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위원회는 2019년 두 차례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일	조항	비고
2019. 3. 20.	제10조의2(차별 금지)	
2019. 8. 21.	제8조(신고자등 보호)	
	제21조(기사 제목)	신설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8년 말 이수역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차별적 발언 및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문제 및 갈등이 대두됨에 따라 2019년 위원회는 언론보도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발언의 확산 통로가 되지 않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 내 차별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기존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 2(차별 금지) 조항에 나열되어 있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국적’, ‘지역’, ‘나이’를 추가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차별적 표현 등을 시정권고 심의대상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인의 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익신고자 신원을 공개한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 등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기사 본문과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자극적·선정적 제목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제8조(신고자등 보호) ① 언론은 다음 각 호의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2. 부패행위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3.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陳情)·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정권고 현황

2019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총 2,658개 매체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418개 매체에 대해 총 1,28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의 수가 증가하는 언론환경을 고려하여 상시 모니터링 매체 수를 2018년 2,392개 대비 266개 매체를 추가하여 2,658개로 확대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시정권고 심의원을 2명 증원하여 충북사무소와 경남사무소에 배치함으로써 시정권고 심의원 10인 체제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시정권고 담당 부서 직원을 포함하여 총 14명의 인력이 상시 모니터링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2017년에 1,034건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한 이후 2018년에 1,275건, 2019년에 1,288건을 기록하여 3년 연속 1,000건 이상의 결정건수를 보였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증가, 상시 모니터링 매체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3. 침해 유형별 분석

2019년 시정권고 결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침해 유형은 '사생활 침해 등'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시정권고 결정은 2017년 217건(21%), 2018년 230건(18%)이었는데 2019년에는 458건(35.6%)으로 집계되어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와 비중이 모두 크게 늘어났다.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시정권고 결정이 많았던 것은 공적 인물·유명인이 아님에도 공적 인물·유명인의 가족 혹은 관련자라는 이유로 이들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보도가 약 300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많았던 침해 유형은 '기사형 광고' 132건(10.2%), '여론조사 보도' 123건(9.5%), '충격·혐오감' 105건(8.2%)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8년 시정권고 침해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나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2019년에는 각각 19건(1.5%), 47건(3.6%)으로 전년 각 54건(4.2%), 285건(22.4%)에 비해 줄었다. 이는 미투(Me Too) 관련 보도가 201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 위원회가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기준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반영한 결과, 차별적 발언, 혐오 표현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9건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결정건수는 적지만 혐오 및 차별 관련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시정권고 사례라 하겠다.

또한 위원회는 2019년 ‘여론조사 보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123건의 시정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2019년 ‘기사 제목’에 대한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낚시성 기사 제목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하여 8건의 결정을 내렸다.

2019년 위원회는 법익 보호 강화를 위해 ‘차별 금지’, ‘여론조사 보도’, ‘기사 제목’, ‘보도 윤리’ 등 다양한 심의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21 |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7. 1. 1. ~ 2019. 12. 31.)

연도	침해 유형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피의자 신원 공개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이동 청소년의 보호	정신 장애자 신원 공개	복합 이질 주민 신원 공개	보도 윤리	차별 금지	음란 포악 진인 범죄 묘사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성 관련 보도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총격 혐의감	여론 조사 보도	기사형 광고		기사 제목
2017	1,034 (100)	217 (21)	4 (0.4)	280 (27.1)	70 (6.8)		27 (2.6)		5 (0.5)	2 (0.2)	3 (0.3)		57 (5.5)	2 (0.2)	1 (0.1)	84 (8.1)	13 (1.3)	1 (0.1)	70 (6.8)		198 (19.1)		
2018	1,275 (100)	230 (18)		108 (8.5)	1 (0.1)	54 (4.2)	285 (22.4)		4 (0.3)	2 (0.2)	7 (0.5)		21 (1.6)	31 (2.4)	13 (1.0)	287 (22.5)		23 (1.8)	73 (5.7)		136 (10.7)		
2019	1,288 (100)	458 (35.6)	25 (1.9)	101 (7.8)		19 (1.5)	47 (3.6)	1 (0.1)		12 (0.9)	1 (0.1)	9 (0.7)	21 (1.6)	68 (5.3)	27 (2.1)	77 (6.0)	42 (3.3)	12 (0.9)	105 (8.2)	123 (9.5)	132 (10.2)	8 (0.6)	

※ () 안의 숫자는 %

가. 사생활 침해 등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건수는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217건, 2018년 230건, 2019년 458건). 특히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2019년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시정권고 결정 458건에는 공적 인물·유명인의 가족 혹은 관련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보도가 약 30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특정 연예인의 범죄 의혹을 다루면서 성적 지향까지 밝힌 보도 약 40건(【사례 1】 참조), 피구조자나 대피자의 초상을 그대로 게재한 보도 약 30건 등의 순이었다.

2019년에는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하여 2건의 재심청구가 접수되었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1항은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청구인들은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보도가 위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정권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원회는 해당 재심청구 건이 제1조제1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례 1 | 사생활 침해 등

몰몬교 신자가 마약까지, [] 부끄러운 민낯

[] 2019.04.10. 07:00

몰몬교 신자로 알려진 방송인 [](60·미국명 [])씨가 과거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당시 동성애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몰몬교는 동성애를 부정하는 보수 성향의 종교로 불리운다. 하씨의 경우 몰몬교 신자로 해당 종교에서 금기시하는 마약과 동성애를 동시에 하는 등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 =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미국명 [])씨가 9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는 모습. 2019.04.09 gatozz@hanmail.net

- 위 기사는 유명 방송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동성애 사실을 공개함. 비록 유명인의 범죄 사건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개인의 내밀영역에 속하는 성적 지향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원 보도에는 당사자의 초상과 성명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나. 차별 금지

위원회는 보도 과정에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쓰거나, 관련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보도 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대표적인 시정권고 사례는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여 성폭력을 유도하고 합의금을 노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경우다(【사례 2】 참조). 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극히 일부의 예를 들어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편견적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선입견 및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 례 2 | 차별 금지 ①

성폭력 유도 성공하면 로또 당첨?

- 남성들 성폭력 두려워 여성접근 고민... 출산저하로 이어져
- 일부여성 직장 다니는 것은 부업... 성폭력 걸리면 합의금 뜯어내는데 혈안
- 체육계 여성 선수들 성폭력 관계없는 여성들까지 오해볼러... 여성 남편들까지 고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에 고민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매년 늘어나는 것이 있다면 로또 복권 판매량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판매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늘어나는 것이 이에 버금가는 것이 있다면 남성을 유혹하여 성폭력으로 이어지면서 합의금을 노리고 있다.

인지도가 높을수록 사건 무마용으로 합의금이 높아 해볼만하다는 얘기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음성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A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실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합의금만 무려 3억원을 날린 적도 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음성 유행은 만18세 미성년일수록 합의금은 높아 로또 사는 것보다는 남성들을 유혹 성폭력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것이 낫다는 평이 나돌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남성과 알게 되면서 발생하는 H모 여성도 남성들 접촉 합의금 뜯어내는데 성공 취업은 부업이고 남성들 유혹 성폭력 합의금으로 혈안되고 있다.

-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성들이 여성의 접근을 기피해 출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사례


또 다른 대표 사례로는 경찰이 유명 남성 프로듀서와 여성 배우의 불륜설을 만들어 유포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유포자가 모두 여성임을 부각한 경우다(【사례 3】 참조). 이는 해당 사안의 핵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성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례 3 | 차별 금지 ②

HOME > 뉴스 > 핫뉴스 > 핫이슈

주연 SNS 막장 소설 짜낸 작가들, 모두 여자.. "소문만 전했을 뿐인데"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2.12 11:15 | 댓글 0



사진= SNS

- 모 남성 프로듀서와 여성 배우 간 불륜설을 퍼트린 아들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고 보도하면서 유포자가 모두 여성임을 기사 제목에 부각한 사례
- 원 보도에는 당사자의 초상과 성명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다. 마약 및 약물보도

2019년 마약 및 약물보도 관련 시정권고 결정은 42건이었다. 2017년 마약 및 약물보도 관련 시정권고 결정이 13건이었고, 2018년에는 관련 결정이 없었다. 2019년에 마약 및 약물보도 관련 시정권고 결정이 증가한 것은 '버닝썬 게이트', 유명 가수의 마약 투약 의혹 폭로 등과 관련하여 마약 관련 보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시정권고 사례는 강남의 클럽 버닝썬 내 특정 마약을 사용한 성폭행 의혹,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 연예인 성매매 알선 의혹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마약의 명칭, 별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한 기사

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사례 4】 참조). 이 기사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해당 마약을 사용한 성폭행 등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 례 4 | 마약 및 약물보도

“10분이면 구입 가능” 논란의 [] 유통실태 추적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주문...사업자등록증 걸어두고 마약류 파는 곳도

[제1396호] 2019.02.08 14:25



[]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사건 외에도 일명 []을 이용한 성범죄가 있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버닝썬의 전 직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VIP룸에서 약물강간이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루가 다르게 터지는 약물 논란에 클럽 마니아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카카오톡만 있으면 누구나 [] 등의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버닝썬 사태로 강간약물 []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흔히 ‘물에 타 먹는 []’이라는 뜻의 []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주 피해자가 여성이라 하여 ‘[]’ 혹은 ‘[]’로 부르기도 한다.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인 []의 효과는 복용 10~20분 이내로 발생한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를 술과 함께 복용하면 취한 듯 정신이 몽롱해지다가 의식을 잃는다. 이런 상태는 5시간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색과 향이 없어 술이나 음료에 섞어도 티가 나지 않고 무엇보다 약 성분이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때 강간약물로 애용되었던 돼지흥분제 []도 [] 등장 이후 그 인기가 시들해졌다. 그러나 []는 과다복용 시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이에 유엔마약위원회는 2001년 []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했고 우리나라도 같은 해 []를 마약류로 지정했다.

(중략)

판매업자는 []를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기절하게 만들어 기억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개 넣으면 기절 시간이 더 길다’고 묻자 “당연하다. 지금 세트로 구매하면 서비스도 많다”며 기사를 회유하기도 했다. 가격은 1병 당 35만 원. 그는 5만 원만 더 내면 흥분제 1병과 발기부전치료제인 아이코스 10정까지 주겠다고 패키지를 권유했다.

흥분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여성이 복용하면 기분이 업되고 성욕이 매우 높아져 약발에 취해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애교 떠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부작용이나 사용법에 대한 주의를 전혀 없었다.

- 기존에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진 마약 보도가 주로 투자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환각적 효능에 대해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위 기사는 여성에게 몰래 먹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일종의 ‘강간약물’에 관한 보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원 보도내용에는 블라인드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라. 충격·혐오감

2019년 충격·혐오감에 대한 시정권고는 105건으로 2018년(73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에 따르면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격·혐오감 관련 기사는 주로 특정 언론사가 비슷한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 례 5 | 충격혐오감

자신 꾸중 듣고 다리 아래로 '투신해' 목숨 끊은 아들 보고 좌절한 엄마

입력 : 2019.04.20 07:27



[] = 엄마와 다툰 아들이 달리던 차에서 내린 뒤 다리 아래로 투신해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후략)

- 중국에서 17살 소년이 엄마와 다툰 후 달리던 차에서 내려 다리 아래로 투신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 투신자살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하여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음

마. 여론조사 보도

매일같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많지만 독자 스스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누락한 채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언론사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여론조사 보도)에 따르면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일시 등 주요 정보를 밝혀야 한다. 위원회는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보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보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2019년 123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교육·취업

정시 놓고 또 쪼개진 교육계

기자

입력 2019.09.06 03:13

교육감협의회 "정시 확대 반대... 정부, 우리와 대입 논의해야"
시민단체 "정시 확대 요구 무시하는 교육장관 즉각 사퇴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불거진 대입 개편 논란이 '정시 확대' 찬반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수시·정시 비율이 곧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지만,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정반대로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성만을 강조하며 정시와 수시 비율이 조정돼 수능이 확대될까 우려된다"며 "교육부는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입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한 줄로 세우는 식의 정시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문제 풀이로 교실 수업까지 왜곡한다"며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문제는 수능이 지닌 문제와는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조국 후보자 자녀 논란을 계기 삼아 정시를 확대하려는 흐름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각종 통계는 수능 정시 확대가 지역·계층 격차를 심화시키고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수능시험과 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정시 확대 반대하는 유은혜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자기소개서 폐지하고 수상 내역 반영하지 않는 것만으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30%로 권고한 정시 비율을 더 확대해달라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무시하는 교육부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각종 조사에서는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이 높다. 이날 공개된 대입 제도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63.2%)이 '수시가 바람직하다'(22.5%)는 응답의 3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한 입시 전문 교육기업이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 3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44%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가장 공정한 평가 요소라고 응답했다.

-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을 밝히지 않음

바. 기사 제목

위원회는 2019년 8월 「시정권고 심의기준」 신설을 통해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2019년에는 총 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에도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낚시성 기사 제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 례 7 | 기사 제목

사 례 7 | 기사 제목

화제

[] 부친 충격고백 "아들 강간범..17년동안"

기사입력 2019. 10. 18 12:16

- 유명 가수 부친의 인터뷰 내용 중 자신의 아들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이 금지된 상황에 대해 아들이 테러분자나 강간범도 아닌데 17년 동안이나 입국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해당 내용 일부만을 기사 제목으로 발췌하여 마치 유명 가수가 강간범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보도한 사례
- 원 보도에는 당사자의 초상과 성명이 게재되었으나 법의 침해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함

4. 매체 유형별 분석

2019년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결정 1,288건 중 인터넷 신문에 대한 결정이 1,101건(8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94건(7.3%)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73건(5.7%)이었다. 아울러 방송, 주간지, 월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결정이 각각 13건, 5건, 2건 있었다.

시정권고 매체 유형 중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50%대, 2015년 60%대, 2016년 70%대를 보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80% 중반대를 보이고 있다. 뉴스 소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 문화체육관광부 정기 간행물로 등록된 매체 중 대부분의 종별은 그 수의 증가세가 미미하거나 없는 반면, 인터넷신문은 2017년 6,800여 개, 2018년 7,800여 개, 2019년 8,800여 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인터넷신문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그로 인한 자극적·선정적인 기사 내용 및 낚시성 기사 제목 남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2 |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7. 1. 1. ~ 2019. 12. 31.)

구분 연도	총계	매체유형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7	1,034 (100)	41 (4.0)	41 (4.0)	12 (1.2)	2 (0.2)	47 (4.5)	878 (84.9)	13 (1.3)
2018	1,275 (100)	38 (3.0)	52 (4.0)	2 (0.2)	1 (0.1)	62 (4.9)	1,102 (86.4)	18 (1.4)
2019	1,288 (100)	34 (2.6)	60 (4.7)	5 (0.4)	2 (0.2)	73 (5.7)	1,101 (85.5)	13 (1.0)

※ () 안의 숫자는 %

5. 시정권고시스템 구축

2019년 위원회는 시정권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업무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정권고 시스템 사용으로 온라인 서식을 통한 안건 작성, 문서 자동화를 통한 결정문 등 작업 효율성 제고, 위원회 내 실시간 안건 공유, 온라인 심의 및 의결, 통계·매체·안건 관리 용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시정권고 사례 검색 등이 가능해졌다.

시정권고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속한 안건 공유 및 체계적인 안건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평 가

2017년 시정권고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시정권고 결정건수가 1,000건을 돌파 (1,034건)한 이래, 2018년에는 1,275건, 2019년 1,288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의 적극적인 적용 및 개정 등을 통해 언론 보도로 인한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2019년 7월경 대다수의 언론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보도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제7차 시정권고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익신고자의 신원 등을 밝히는 보도로 인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을 언론사에 전달하기로 의결하고 위원회 심의 대상 매체 2,658곳에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요청 서한을 보내 주의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언론의 공익신고자 신원공개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8조(신고자등 보호)를 개정하여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 범죄신고자 등을 포괄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더해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조항에 ‘국적’, ‘지역’, ‘나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대상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제21조(기사 제목) 조항을 신설하여 왜곡되거나 자극적인 제목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등 개인적 법익 및 사회적 법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신규 인터넷신문 266개를 상시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하였다. 더불어 시정권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기반 모니터링 및 심의가 가능하도록 업무환경을 구현하였고 언론사 대상 시정권고 교육을 연 4회 실시하여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언론사의 이해를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시정권고 업무 수행 및 실효성 있는 시정권고제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사회적 관심과 흐름을 반영한 시정권고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개정 및 신설에 나설 예정이며,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등 바람직한 시정권고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 3 장

선거기사심의

제 1 절

개 요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선거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심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및 언론학회·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심위 설치기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다.

재·보궐선거는 통상 연 1회 실시되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없는 때에는 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선심위는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이하 '정기간행물 등')에 보도된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선심위는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심의 안건의 선거기사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위반정도에 따라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 의해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해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선심위 심의의결 절차

가. 자체심의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실무부서 직원 및 선거기사심의원이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선거 관련 기사 가운데 선거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를 선정해 선심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선심위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규정 위반여부를 심의한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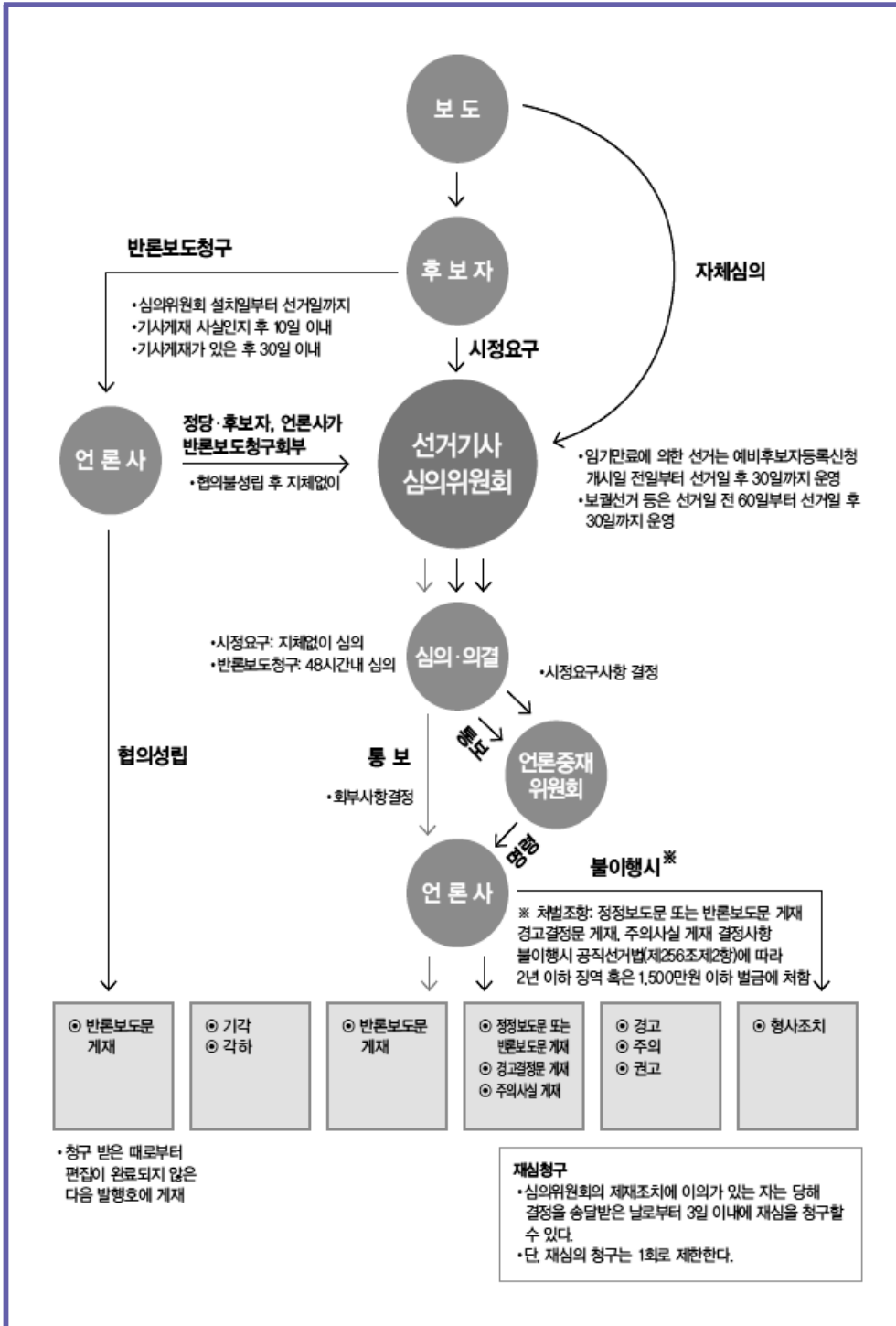
나.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 운영기간 동안 정기간행물 등에 실린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심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심위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하고 시정요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자체심의와 마찬가지로 선심위의 제재조치 결정은 위원회에 통보되며,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결정사항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시정요구의 내용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부적법할 경우에는 선심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심위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 등에 게재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선심위에 회부할 수 있다. 선심위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심의의결 흐름도 】



제 2 절

주요 추진실적

1. 2019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가. 설치·운영

2019년 재·보궐선거 선심위(선거일: 2019년 4월 3일)는 2019년 2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설치·운영되었다. 2019년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개, 시의회 의원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구: 총 5개 】

국회의원(2)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시의원(3)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선거구, 경북 문경시 라선거구

【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 】

구분	성명	주요이력	추천기관
위원장	이용성	한서대 미디어센터장	한국언론학회
부위원장	김영철	(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기용	법무법인 로비즈 변호사	자유한국당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바른미래당
	이장희	법무법인 송담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춘발	(전) 한국기자협회장	한국기자협회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홍국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겸임교수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공직선거법상」 추천단체 순서에 따름



나. 심의·의결현황

선심위는 2019년 재·보궐선거가 운영된 90일 동안 5차례의 회의를 열어 자체심의 1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시정요구심의 안건은 없었다.

선심위는 14건의 상정안건 중 9건에 대해 주의사실 게재 1건, 경고 2건, 주의 4건, 권고 2건의 제재결정을 내렸다. 심의규정 위반정도가 경미한 4건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불문처리하였다.

제재결정이 내려진 9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 8건, 여론조사 보도 관련 기준 위반 1건이었다. 매체별로는 지역일간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주간지 2건, 중앙일간지 1건이었다.

표 23 | 2019년 재·보궐선거 선심위 자체심의 제재결정 현황

(2019. 2. 2. ~ 2019. 5. 3.)

간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 및 사실 보도	광고 제한	후보자 기고 제한	여론 조사 보도	경고 결정문 게재	주의 사실 게재	경고	주의	권고
일간지	중앙	1	1							1	
	지역	6	5			1		1	2	1	2
주간지	종합	2	2							2	
	지역										
월간지											
뉴스통신											
계	9 (100.0)	8 (88.9)				1 (11.1)	1 (11.1)	2 (22.2)	4 (44.5)	2 (22.2)	

* ()안의 숫자는 %

사 례 1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주의사실 게재 사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알림

본지는 2019년 3월 13일자 3면 「폐곡 '친노와 친박'의 부활을 보며...」, 2019년 3월 20일자 3면 「짧은 정당 바른미래당을 주목하라」 제목으로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특정 정당 후보자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

정 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주의사실 게재 결정을 받음

사 례 2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경고 조치 사례)

창원성산보궐 민주개혁진영 후보 지지율 확보 '각축'

43국회의원 창원성산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개혁진영 후보들이 당원 또는 표적 집단을 동원한 지지사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민호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을 위한 민주진보계열 진영의 단일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의원들은 "특정계열 부정세력과 한연도 평화 체제 구축을 방해하는 세력에게 창원성산에 내어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 후보 단일화 협상을 통한 시너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창원국가산단이 스마트도시산단으로 전환했다. 허성무 시장이 시작한 스마트도시산단은 여당의 후보 권민호가 완성할 수 있다"며 "2022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도시산단이 완성되면 기존 일자리에 더해 1만여개의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말했다.

또한 "창원 르네상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 허성무 시장, 권민호 후보가 함께하는 밑거름이 이뤄졌을 때 현실이 된다"며 "진짜 창원경제 발전을 원하신다면 창원성산에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라면서 "권민호 후보가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애당초 출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출근 인사를 하는 곳마다 바로 옆에서 자유한국당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것은 본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들이 권민호 후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달았다.

■ 손석형 민중당 후보

'손석형후보 창년선거대책본부'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당 당내 조직인 창년선거대책본부가 지난 8일부터 창년선거대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구하고서 세명모듬을 진행해 일출 만에 115명의 서명을 받아 손석형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간원 창년선거대책본부는 △공공부분의 일자리 확대 △창년대의무고용할당 5% 실시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 △출입 시 미취업 창년들을 위한 실업급여 지

급 △창년종합센터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에 손석형 후보가 창년선대본이 제안한 창년일자리해결법과 함께 △창년경관 살리기 △창년 뽕새 10만원 상한제 등을 추가로 공약했다고도 밝혔다.

손석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창원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국회에 반드시 들어가 창년들과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창원공단 안에 살아야 창년 일자리도 산다"며 창년공단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채용절차 의혹을 받고 있다. 김원연도 권선동 영동출 의원, KT 김성태 의원 등 뉴스가 끊이지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채용절차 의혹, 공정한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창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가"며 "한국당으로 자유한국당은 채용절차이다. 비리의 사슬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영국 정의당 후보

이영국 후보는 20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성 지지사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후보 선대본에 따르면 이번 지지사실은 창원 성산구를 중심으로 경남 지역에서 확보도, 직간접을 비롯해 다양한 여성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또한, 김수현 변호사(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장), 김은경 목사, 양해진 교수(경희대 후유학), 스텔라지, 최순영 전 국회의원(전 YH노동조합 지부장), 최은진 전 철교유을 위한 전국학생모임 회장 등 다채로운 여성을 포함한 30여명이 이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사실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지사실문을 통해 "느린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성평등한 나라"라고 했던 공약화한 전 의원의 생년 활동을 되새겼다. 또한, 최은진 변호사, 김원연 의원, 김기영 성폭력 사건 등과 관련해 노화한 의원과 같이 여성인권과 성평등 세상을 위해 앞장서 줄 국회의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도의원 시절 이영국 후보가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지키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점을 언급하며 "국회 내에 서 장차고 있는 대우방안을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김수현과 심리를 갖추고 있다"며 지지했다. 또한 "창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의 경제 참여율과 여성의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며, "여성이 일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창년"을 위해 이영국 후보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근 기자 yjgh2010@naver.com

▶ 특별한 사유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몇몇 후보자의 공약만을 선별적으로 보도하여 경고 결정을 받음

사 례 3 | 여론조사 보도 규정 위반 (권고 조치 사례)

민주당 창원성산 공천 권민호 단독 신청
한국 강기윤·정의 여영국과 3파전 되나

여야, 4·3 재보선 공천작업 속도
민주·한국 새인물 영입 가능성도
성산 진보진영 단일화가 변수
통영고성 與 5명·한국 3명 후보



권민호 강기윤 여영국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열리는 4·3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새로운 인사의 영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모 결과 경남 창원 성산에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이 단독으로 응모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영·고성에는 김영수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교육특보,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최상봉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부위원장, 홍순우 전 경남도지사 정무특보, 홍영두 통영·고성 지속가능사회포럼 상임대표 등 5명이 신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마감한 자유한국당의 공모에도 창원 성산에는 강기윤 전 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통영·고성에는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등 3명이 응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 포인트)를 한 결과, 창원 성산에서는 강기윤 한국당 예비후보(26.6%)와 정의당 여영국예비후보(25.3%)가 오차범위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권민호 예비후보는 7.1%로 3위였다. 정의당과 민주당 등의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따라 반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영·고성에는 서필언(19.0%) 김동진(16.3%) 예비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한국당 후보군이 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예비후보가 8.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여야의 후보 선출이 확정되면 이 지역 반세 역시 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36.1%)과 민주당(34.8%)의 정당 지지도가 박빙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지난 15~17일 사흘간 창원시 성산과 통영·고성에 거주하는 성인 700명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지를 참조하면 된다.

- ▶ 후보적합도 조사 결과 3, 4위 후보의 결과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제목에 '3파전'이라고 보도해 권고 조치를 받음

2.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실시

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기사 관련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언론사와 후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선심위 구성과 역할, 선거보도 관련 법규 및 심의규정 위반사례 등이다. 위원회는 언론사 소속 기자 7회, 후보자 2회, 지자체 공무원 1회 등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을 총 10회 실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규정과 주요사례를 Q&A 형식으로 작성한 「알기 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을 제작, 발간하여 심의대상 언론사에 배포하고 기자 대상 교육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 언론사 배포용 선거기사 가이드북 】

알기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 선거기사심의 전문교육 실시 현황 】

구분	일자	대상
후보자	2019. 2. 15.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2019. 2. 21.	경북 문경시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언론사	2019. 11. 4.	강원도민일보 기자
	2019. 11. 8.	전북일보 기자
	2019. 11. 19.	경남울산기자협회 소속 기자
	2019. 11. 28.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소속 기자
	2019. 12. 3.	전라일보 기자
	2019. 12. 4.	지역언론사 기자
	2019. 12. 17.	지역언론사 기자
지자체	2019. 4. 9.	용산구청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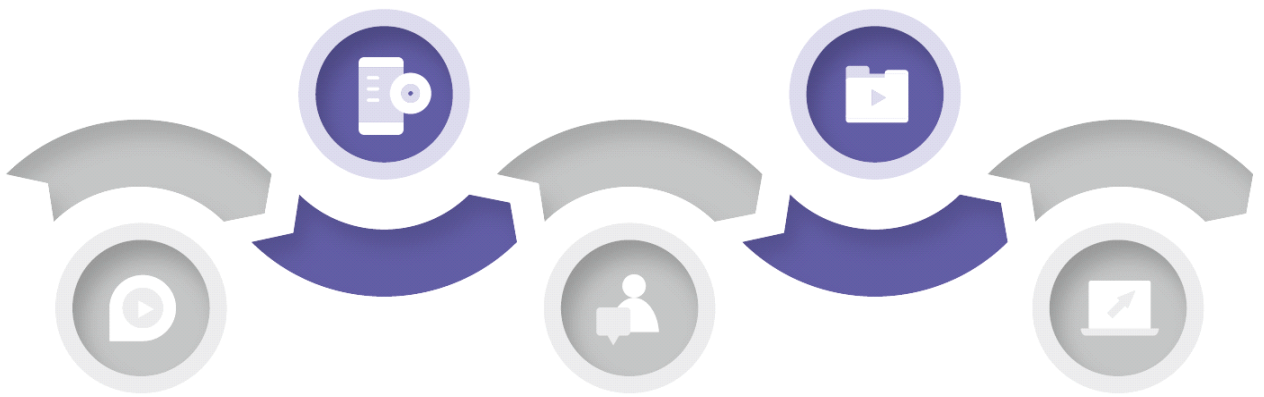
제 3 절 평 가

2019년 재·보궐선거 선심위는 선거가 실시된 5개 선거구 관련 선거기사의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9건의 심의규정 위반보도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다. 또 위반수준이 경미하여 제재 결정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서도 관련 심의규정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불공정 선거기사에 적극 대처하였다.

2019년 2월 26일에는 2019년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보도 심의기구 간 업무협의회에 참석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2019년 11월 2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업무협의회를 주최하여 심의기구별 심의규정 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선심위 운영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선심위 상설화이다. 선심위의 한시적 운용으로 인한 심의 공백 문제, 선거기사심의규정 적용의 연속성·일관성 및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 등의 문제는 매 선거시기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2019년 5월 31일 선심위 상설화 및 정당도 시정요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지역 언론사 대상 선거기사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심의대상 언론사에 「알기 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불공정 선거기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공정한 심의를 하는 한편,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제3부 **언론중재위원회**
일반사업

제 1 장

언론피해 상담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은 민원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언론분쟁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효과적인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언론조정 및 중재신청서 작성부터 접수, 심리에 이르기까지 각 진행 절차별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일괄적인 언론피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사건 접수 이후의 절차 안내를 보다 강화하여 민원인의 위원회 절차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언론피해 상담 신청은 전화나 방문 상담 외에도 인터넷 게시판, 실시간 채팅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3,292건의 상담을 처리함으로써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3천 건이 넘는 상담건수를 기록하였다.

제 2 절 주요 실적

1. 상담신청 유형

2019년 전체 상담 건수는 3,292건으로 2018년에 비해 104건(3.1%) 감소하였다. 상담신청 유형별로는 전화를 통한 상담이 2,777건(84.4%)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200건(6.1%), 국민신문고 114건(3.5%), 인터넷 게시판 109건(3.3%), 인터넷 실시간 52건(1.6%)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첩되는 국민신문고 상담신청은 작년에 비해 100건 이상 감소하였다.

표 24 | 상담신청 유형 (2017. 1. 1. ~ 2019. 12. 31.)

연도	구분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국민신문고	기타
	상담건수								
2017	2,965 (100)		2,347 (79.2)	144 (4.9)	47 (1.6)	80 (2.7)	75 (2.5)	259 (8.7)	13 (0.4)
2018	3,396 (100)		2,672 (78.7)	209 (6.2)	146 (4.3)	94 (2.8)	31 (0.9)	233 (6.9)	11 (0.3)
2019	3,292 (100)		2,777 (84.4)	200 (6.1)	52 (1.6)	109 (3.3)	34 (1.0)	114 (3.5)	6 (0.2)

※ () 안의 숫자는 %

2. 상담 처리결과

2019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은 조정절차 안내로 처리된 건수가 3,108건(7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상담 예정 482건(11.5%), 법적절차 안내 336건(8.0%), 타 기관 안내 218건(5.2%) 등이었다.

재상담 예정 건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2.6% 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민원인과의 최초 상담 진행 시 충분하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 결과로 보인다.

표 25 | 상담 처리결과 (2017. 1. 1. ~ 2019. 12. 31.)

연도	구분 상담건수	처리결과 건수	상담 처리결과					기타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 기관 안내	자체 종결	
2017	2,965	4,066 (100)	2,821 (69.4)	193 (4.7)	522 (12.8)	461 (11.3)	28 (0.7)	41 (1.0)
2018	3,396	4,677 (100)	3,244 (69.4)	215 (4.6)	661 (14.1)	463 (9.9)	63 (1.3)	31 (0.7)
2019	3,292	4,199 (100)	3,108 (74.0)	336 (8.0)	482 (11.5)	218 (5.2)	12 (0.3)	43 (1.0)

※ () 안의 숫자는 %

※ 상담 처리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 처리결과의 합계가 불일치

※ 자체종결 및 기타는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3.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9년 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한 피해 유형은 '명예훼손'에 관한 상담이 2,859건(86.8%)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피해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어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가 182건(5.5%), '사생활 침해' 55건(1.7%), '재산상 손해' 38건(1.2%) 등의 순이었다.

표 26 | 피해 유형별 상담현황

(2017. 1. 1. ~ 2019.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명예 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기타
2017	2,965 (100)	2,471 (83.3)	185 (6.2)	40 (1.3)	43 (1.5)	226 (7.6)
2018	3,396 (100)	2,904 (85.5)	225 (6.6)	38 (1.1)	47 (1.4)	182 (5.4)
2019	3,292 (100)	2,859 (86.8)	182 (5.5)	55 (1.7)	38 (1.2)	158 (4.8)

※ () 안의 숫자는 %

4. 상담매체 유형

2019년 상담 대상 매체는 인터넷신문이 1,918건(4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송 679건(15.5%), 일간신문 419건(9.6%), 인터넷뉴스서비스 321건(7.3%), 뉴스통신 227건(5.2%), 주간신문 130건(3.0%)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을 포함해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상담 비중은 전체 상담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매체 등록건수의 증감에 비례해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면신문(일간신문과 주간신문)에 대한 상담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언론관계법상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을 포함해 인터넷 기반의 신(新) 유형 미디어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법 개정과 관련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 기반 매체에 대한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지면신문 등 기존 매체에서는 볼 수 없던 인터넷 기반 매체만의 특성인 신속한 파급력, 지속적인 검색 가능성 등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수단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27 | 상담매체 유형

(2017. 1. 1. ~ 2019.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매체 건수	상담매체 유형									
			일간 신문	주간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불명
2017	2,965	3,848 (100)	408 (10.6)	115 (3.0)	549 (14.3)	17 (0.4)	213 (5.5)	1,389 (36.1)		283 (7.4)	56 (1.5)	818 (21.3)
2018	3,396	4,391 (100)	397 (9.0)	167 (3.8)	568 (12.9)	21 (0.5)	224 (5.1)	1,846 (42.0)	4 (0.1)	359 (8.2)	58 (1.3)	747 (17.0)
2019	3,292	4,371 (100)	419 (9.6)	130 (3.0)	679 (15.5)	11 (0.3)	227 (5.2)	1,918 (43.9)		321 (7.3)	48 (1.1)	618 (14.1)

※ () 안의 숫자는 %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5. 상담신청인 유형

2019년 위원회 상담창구를 이용한 상담신청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2,147건 (65.2%), 회사 421건(12.8%), 일반단체 328건(10.0%), 지자체 및 공공단체 220건 (6.7%), 국가기관 84건(2.6%), 교육기관 55건(1.7%), 종교단체 37건(1.1%) 순으로 나타나 작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8 | 상담신청인 유형

(2017. 1. 1. ~ 2019.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신청인 유형						
		개 인	국가 기관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지자체 및 공공단체
2017	2,965 (100)	2,096 (70.7)	57 (1.9)	218 (7.4)	336 (11.3)	66 (2.2)	30 (1.0)	162 (5.5)
2018	3,396 (100)	2,284 (67.3)	93 (2.7)	316 (9.3)	400 (11.8)	54 (1.6)	47 (1.4)	202 (5.9)
2019	3,292 (100)	2,147 (65.2)	84 (2.6)	328 (10.0)	421 (12.8)	55 (1.7)	37 (1.1)	220 (6.7)

※ () 안의 숫자는 %

6. 상담대상 유형

2019년 위원회에 접수된 상담대상 유형은 원기사 3,165건(85.7%), 매개기사 372건(10.1%), 유사미디어콘텐츠 41건(1.1%), 복제기사 28건(0.8%), 댓글 12건 (0.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원기사에 대한 상담 비중은 2018년에 비해 8.4% 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원기사를

매개한 기사의 상담은 5.5% 포인트, SNS에 그대로 전제된 복제기사의 경우는 2.3%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위원회가 상담 이용자에게 원 기사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해당 원기사의 매개기사 및 복제기사에 대한 상담까지도 일괄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9 | 상담대상 유형

(2017. 1. 1. ~ 2019.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 대상 건수	상 담 대 상					
			원기사	매개 기사	댓글	복제 기사	유사 미디어 콘텐츠	기타
2017	2,965	3,965 (100)	2,769 (69.8)	709 (17.9)	65 (1.6)	206 (5.2)	54 (1.4)	162 (4.1)
2018	3,396	4,243 (100)	3,280 (77.3)	662 (15.6)	34 (0.8)	130 (3.1)	54 (1.3)	83 (2.0)
2019	3,292	3,694 (100)	3,165 (85.7)	372 (10.1)	12 (0.3)	28 (0.8)	41 (1.1)	76 (2.1)

※ () 안의 숫자는 %

※ 상담대상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대상의 합계가 불일치

※ 용어설명

매개기사 : 포털이나 댓글 등에서 원 언론보도를 전제한 것

복제기사 :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 언론보도를 전제한 것

유사미디어 콘텐츠 : 블로그나 유튜브 등 SNS에서 언론보도와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산한 것

7. 상담내용 유형

2019년 접수된 상담내용은 정정 및 반론보도 관련 상담 2,700건(53.1%), 손해배상 1,605건(31.5%), 기사열람·검색 차단 등 494건(9.7%), 추후보도 77건(1.5%), 형사고소 48건(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에 대한 상담 비중이 2017년 28.5%, 2018년 30.3%, 2019년 31.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상담신청인이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서 금전적인 배상을 적극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인터넷 기반 매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사열람이나 검색 차단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보도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에 대한 요구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열람차단청구권과 같은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 마련 및 시급한 도입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0 | 상담내용 유형

(2017. 1. 1. ~ 2019. 12. 31.)

연도	구분 상담 건수	상담 내용 건수	상담내용 유형							
			정정 및 반론보도	추후 보도	손해 배상	금지 청구	기사열람· 검색 차단 등	강제 집행절차	형사 고소	기타
2017	2,965	4,692 (100)	2,384 (50.8)	110 (2.3)	1,337 (28.5)	14 (0.3)	489 (10.4)	2 (0.0)	92 (2.0)	264 (5.6)
2018	3,396	5,512 (100)	2,896 (52.5)	95 (1.7)	1,671 (30.3)	25 (0.5)	617 (11.2)	5 (0.1)	54 (1.0)	149 (2.7)
2019	3,292	5,088 (100)	2,700 (53.1)	77 (1.5)	1,605 (31.5)	14 (0.3)	494 (9.7)	2 (0.0)	48 (0.9)	148 (3.0)

※ () 안의 숫자는 %

※ 상담내용 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내용 유형의 합계가 불일치

제 3 절 평 가

2019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언론피해구제 상담을 강화하고 사건 접수 방식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펴글·넷글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신청서 작성 예문을 지원하는 등 일괄적인 피해구제 상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신청서 작성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인이 같은 언론사가 보도한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매체유형(ex. 지면, 인터넷)만 다른 경우 매체유형별이 아닌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참조 예문에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 등을 이해하기 쉽게 바꿨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19년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위원회를 이용한 상담이용자의 종합만족도는 87.4점으로 2018년에 비해 1.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원의 경청자세, 친절성, 상담 적극성·신속성·신뢰성 조사 항목에서 모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였다. 다만, 언론피해구제 상담의 문제해결 도움도는 82.6점으로 2018년보다 평균 0.1점 오르는 데 그쳤고 조사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용만족도 조사 시 보도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보도에 대한 불만 처리 요구,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징계 요청 등 현행 언론중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원하는 상담이용자의 응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뉴스 유통 및 소비 방식은 다양해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현행 언론피해구제체도가 미치지 못하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상담 사례 연구와 미디어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상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구제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 2 장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제 1 절 개 요

2019년 위원회는 교육신청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언론중재아카데미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분쟁해결 전문연수’ 중 일부 과정을 통합·폐지하고 교육과정 전반을 교육 대상별로 새롭게 구분하였으며,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2019년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실시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 소속 교육 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언론피해 예방 방안 및 위원회 조정·중재 절차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은 총 192회 실시하였다.

언론인 대상 연수 과정으로는 <언론인 전문 연수>와 <지역 언론인 워크숍>이 개설 됐는데, <언론인 전문 연수>는 지역 언론인의 올바른 보도 윤리 함양을 위해 2019년 신설한 과정으로 총 8회 진행하였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은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회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총 3회 실시하였다. 특히 <지역 언론인 워크숍> 프로그램에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선거기사심의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선거보도에 대한 지역 언론인의 법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는 <변호사 연수>와 <예비법조인 연수>가 각각 진행됐다. 위원회는 대전·광주·부산 등 서울 및 수도권 외 지역에도 <변호사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전국 각지에 산재한 법조인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전국 법학

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법조인 연수>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각 1회씩 진행되었으며, 개선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로스쿨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 연수>와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가 있다. 총 8회 실시한 <대학생 연수> 과정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였다. 언론인을 지망하는 예비언론인을 대상으로 신설된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성(性) 평등 관련 논의점, 혐오·차별 이슈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예비언론인이 갖춰야 할 자세와 법적 소양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인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실시 횟수는 총 135회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2019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및 혐오표현 이슈를 다루면서 이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시각과 올바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함양하도록 유도해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및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2019년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기존 '공무원 연수', '외국인 연수', '기관 위탁 연수' 등 각급 기관에서 신청하여 개설되는 연수 과정을 <맞춤형 위탁 연수>로 통합하여 총 8회 실시하였다. 아울러 단체로 진행되는 <맞춤형 위탁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개별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업 임직원 및 기타 개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연수>를 함께 운영하였다. 2019년 <일반인 연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오보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총 5회 진행됐다.

표 31 | 2019년도 교육 실시현황

(2019. 1. 1. ~ 12. 31. / 단위 : 회)

구분	연수 프로그램	상시접수 교육	계
언론인	12	37	49
(예비)법조인	8	2	10
대학생	9	20	29
초·중·고 학생	135	10	145
공무원 등	7	117	124
기업 임직원	2	5	7
기타	3	1	4
계	176	192	368

제 2 절

주요 추진실적

1.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2019년 위원회는 총 192회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강 대상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등 117회, 언론인 37회, 초·중·고 및 대학생 30회, 기업 임직원 5회, (예비)법조인 2회 순이었다. 예년에 비해 총 교육 횟수는 줄어들었으나,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주안점을 두었던 언론인 대상 교육 횟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수의 기관 및 단체들이 일회성 교육 수강에 머물지 않고 정기적으로 교육 수강을 위하여 신청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수요 창출이 이루어졌다.

표 32 | 최근 3년간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 실시현황

(2017. 1. 1. ~ 2019. 12. 31.)

연도	대상	언론인	(예비)법조인	학생	공무원 등	기업 임직원	기타	계
2017		26 (616)	4 (221)	54 (2,424)	161 (7,758)	6 (139)	-	251 (11,158)
2018		29 (621)	3 (235)	42 (2,006)	133 (7,730)	10 (351)	-	217 (10,943)
2019		37 (883)	2 (64)	30 (1,311)	117 (5,650)	5 (192)	1 (20)	192 (8,120)

※ ()의 숫자는 교육인원

2. 언론인 대상 교육

가. 언론인 전문 연수

2019년 위원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인 전문 연수>를 총 8회(수도권·강원 4회, 대전·세종·충청 / 광주·전라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각 1회) 실시하였다.

<언론인 전문 연수>는 언론분쟁 예방법, 위원회 조정·중재절차 소개, 시정권고 심의기준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최한 대전, 광주, 부산 및 대구 지역의 <언론인 전문 연수> 과정에서는 지역 인터넷 저널리즘의 미래와 인터넷신문 윤리, 자율심의 사례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표 33 | <언론인 전문 연수> 실시 현황

(2019.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대전 지역 언론인 전문 연수	4. 24.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언론인	17명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5. 16.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언론인	42명
제2차 언론인 전문 연수	6. 20.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언론인	35명
광주 지역 언론인 전문 연수	7. 12.	광주, 전라 지역 언론인	24명
부산 지역 언론인 전문 연수	9. 20.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언론인	23명
제3차 언론인 전문 연수	9. 27.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언론인	34명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	11. 1.	수도권 및 강원 지역 언론인	30명
대구 지역 언론인 전문 연수	11. 8.	대구, 경북 지역 언론인	9명

【 광주, 전라 지역 <언론인 전문 연수> 】



나. 지역 언론인 워크숍

위원회는 지역 군소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지역 언론인 보도 윤리 개선을 위해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 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한 <지역 언론인 워크숍>을 총 3회 실시하였다.

〈지역 언론인 워크숍〉에서는 언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및 위원회 피해구제 절차가 주로 다루어졌으며, 제3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에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 선거보도심의 유관기관의 선거보도 심의기준 관련 교육과 데이터 활용 선거보도 기법 교육 등이 제공되어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공정 선거보도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34 | 〈지역 언론인 워크숍〉 실시 현황

(2019.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5. 29.	전국 언론인	21명
제2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1. 28. ~ 11. 29.	전국 언론인	25명
제3차 지역 언론인 워크숍	12. 4. ~ 12. 5.	전국 언론인	34명

3. 법조인 대상 교육

가. 변호사 연수

위원회는 2017년부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변호사 연수〉 교육 프로그램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의무연수 이수 시간 인정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최근 언론분쟁 관련 판례의 동향 및 법적 쟁점, 최근 언론조정사례의 경향 및 특징, 위원회를 통한 언론분쟁 조정절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2019년 총 6회의 〈변호사 연수〉를 실시했으며, 대전·부산·광주 지역에서도 〈변호사 연수〉 과정을 운용하여 지역 거주 변호사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표 35 | 〈변호사 연수〉 실시 현황

(2019.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변호사 연수	3. 22.	수도권 변호사	33명
제2차 변호사 연수	5. 24.	수도권 변호사	24명
제3차 변호사 연수	7. 12.	대전 지역 변호사	10명
제4차 변호사 연수	9. 26.	수도권 변호사	30명
제5차 변호사 연수	10. 30.	부산 지역 변호사	5명
제6차 변호사 연수	11. 29.	광주 지역 변호사	13명

나. 예비법조인 연수

위원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및 겨울방학에 <예비법조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겨울방학 실무수습을 2주 80시간에서 1주 40시간으로 조정하되 밀도와 집중도를 높여 운영하였다. <예비법조인 연수>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쌓고 언론분쟁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언론법제와 조정제도에 대한 강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언론소송의 쟁점, 조정심리 참관 및 모의조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위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교육생들의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표 36 |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현황

(2019.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예비법조인 연수	2. 11. ~ 2. 15.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43명
제2차 예비법조인 연수	8. 19. ~ 8. 23.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29명

【제2차 <예비법조인 연수>】



4. 대학생 대상 교육

가. 대학생 연수

위원회는 2019년 8차례에 걸쳐 총 27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였다. <대학생 연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법적 쟁점’,

‘위원회를 통한 언론분쟁의 해결 절차’ 등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침해 분쟁 진반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교육 내용을 대학생 교육생들에게 전달하였다. 특히 전·현직 언론사 기자 등 언론인 출신을 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언론인이 알려주는 언론 현장과 취재 방법’ 등의 내용을 구성해 언론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상대적으로 위원회 교육을 수강할 기회가 적었던 지역 소재 대학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총 8차례의 연수 중 4차례를 전북, 충남, 경남 지역에서 실시하는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37 | <대학생 연수> 실시 현황

(2019.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대학생 연수	1. 24.	성균관대학교 대학생	24명
제2차 대학생 연수	1. 31.	성균관대학교 대학생	15명
제3차 대학생 연수	3. 29.	전북대학교 대학생	38명
제4차 대학생 연수	4. 8.	원광대학교 대학생	75명
제5차 대학생 연수	4. 30.	경남대학교 대학생	40명
제6차 대학생 연수	5. 17.	전국 대학생	15명
제7차 대학생 연수	5. 23.	충남대학교 대학생	46명
제8차 대학생 연수	7. 24.	중앙대학교 대학생	26명

【제7차 <대학생 연수>】



나.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위원회는 대학생 연수의 심화과정으로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신설하였다. 3일 과정으로 구성된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에서는 여성인권 침해 등 성(性) 차별적 보도사례 연구, 혐오표현 및 차별적 발언과 언론 보도와의 관계 분석, 언론법제 및 보도윤리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그 밖에도 기자, PD 등의 다양한 직군의 언론인이 알려주는 언론 현장에 관한 내용도 교육에 포함시켜 언론인을 지망하는 교육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위원회는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예비 언론인들이 언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양식과 소양을 선제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언론분쟁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향후 언론 자유와 인격권 보호라는 가치를 충실히 고려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38 |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실시 현황

(2019.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7. 17. ~ 7. 19.	전국 대학생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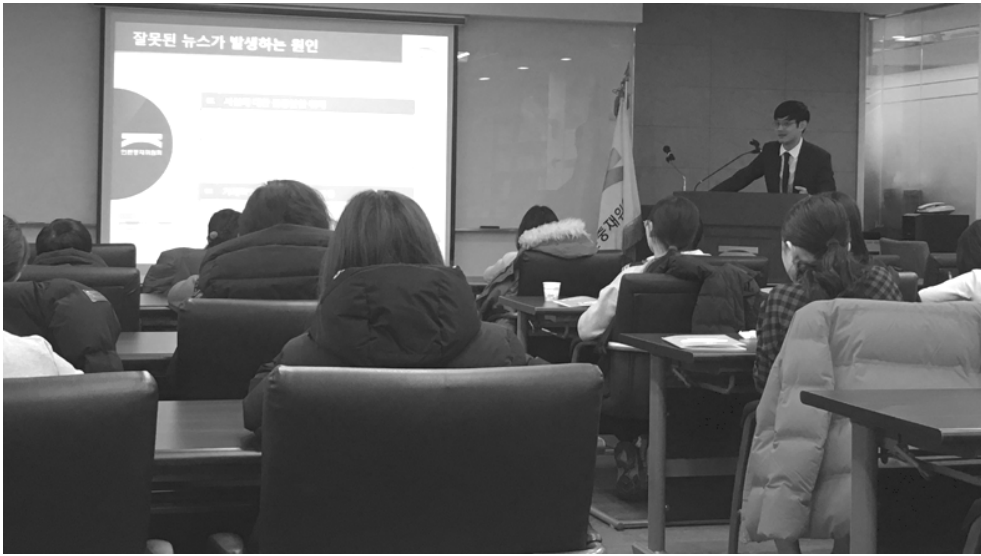
5. 청소년 대상 교육

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인격권 관련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은 전국 각 지역에서 총 135회 실시하여 역대 최고 교육 횟수를 기록하였으며, 교육 수강 인원 역시 역대 최대인 2,564명을 기록하였다.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고 이용하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였다. 미디어의 윤리적 이용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한편, 명예 훼손 이외에 오보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양상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다.

2019년 여름방학에 실시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부터는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서울 지역 중학생 대상 교육에도 심리실 및 언론사 등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 10개 지역사무소에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퀴즈 콘텐츠를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균질한 교육 수준이 이루어 지도록 힘썼다.

【 겨울방학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



6. 각급 기관 대상 교육

위원회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각급 기관의 신청을 받아 총 8차례 연수를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오보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언론분쟁 사례 및 언론사 대응 방법 등이었으며, 특히 실제 언론분쟁 사례를 이용한 조정 실습(모의조정)에 대한 수강자의 호응과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표 39 | <맞춤형 위탁 연수> 실시 현황

(2019.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교원 연수	1. 16. ~ 1. 18.	전국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8명
제1차 맞춤형 위탁 연수	2. 11.	국방정신전력원 교육생	32명
제2차 맞춤형 위탁 연수	6. 12.	중국 언론인	13명
제3차 맞춤형 위탁 연수	7. 3.	국방정신전력원 교육생	32명
제4차 맞춤형 위탁 연수	8. 19.	국방대학교 교육생	213명
제5차 맞춤형 위탁 연수	8. 21.	통일교육원 교육생	30명
제6차 맞춤형 위탁 연수	8. 21.	통일교육원 교육생	30명
제7차 맞춤형 위탁 연수	9. 23.	국방정신전력원 교육생	17명

【중국 언론인 대상 제2차 <맞춤형 위탁 연수>】



7. 일반인 연수

위원회는 2019년부터 ‘언론대응 및 홍보 과정’과 ‘위기관리 및 대응실무 과정’을 폐지하고, <일반인 연수>로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일반인 연수>는 언론법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포함하여 기업 또는 기관의 홍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일반인 연수>는 기업 또는 기관의 위기 발생 시 언론 및 SNS를 통한 대응방법과 1인 미디어 관련 분쟁의 해결방안,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총 5회 진행됐다.

표 40 | <일반인 연수> 실시 현황

(2019. 1. 1. ~ 12. 31.)

과정명	일자	대상	인원
제1차 일반인 연수	3. 18.	일반인 등	38명
제2차 일반인 연수	3. 25.	일반인 등	28명
제3차 일반인 연수	5. 27.	일반인 등	40명
제4차 일반인 연수	7. 9.	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등	30명
제5차 일반인 연수	9. 30.	기업 및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등	25명

8. 교육콘텐츠 개발

2019년 위원회는 시의성 있는 최신 언론계 동향, 관련 판례 등을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여 교육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대상별 교육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조정사례를 제공하는 등 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존에 제작, 활용하고 있던 교육 PPT에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는 등 내부적인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 강사 및 운영진 등 실무진 중심으로 정기적인 콘텐츠 강화 전략 회의를 실시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제 3 절

평 가

2019년 위원회는 언론중재아카데미 운영의 내실화를 목표로 다채로운 교육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그 결과 2019년 총 368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12,024명이 위원회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였다. 2019년 한 해 위원회 교육사업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교육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교육 신청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서 단체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위원회가 개별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방식에 따라 구분했던 언론중재아카데미를 언론인, 법조인, 대학생, 청소년, 각급 기관 및 일반인 등 신청자 유형별로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의 연간일정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 이용자가 사전에 교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 과정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연수 과정을 통합하고, 교육 수요가 감소한 일부 교육 과정은 폐지하여 언론중재아카데미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기존 ‘갈등해결 역량강화 과정’, ‘언론대응 및 홍보 과정’, ‘위기관리 및 대응 실무과정’은 <일반인 연수>로, ‘공무원 연수’, ‘기관위탁 연수’, ‘외국인 연수’는 <맞춤형 위탁 연수>로 각각 통합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언론인 및 예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매년 1천 개 이상 증가하는 인터넷신문에 소속된 언론인의 보도 윤리와 인격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언론인 전문 연수>를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새롭게 추가하

였다. 전국의 지역 인터넷신문 소속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인 전문 연수>에서는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인격권 침해 유형 및 언론분쟁예방 방안, 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주된 주제로 다루었으며, 인터넷신문 윤리, 시정권고제도 및 선거기사심의제도 등 인터넷신문 기자가 알아야 할 법적, 윤리적 상식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언론인 전문 연수> 교육 과정에 대한 인터넷신문 언론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했으며, 향후에도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9년에는 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인격권에 대한 인식과 보도 윤리를 함양한 언론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였다. 3일 과정으로 진행한 <예비 언론인을 위한 언론중재아카데미>에서는 최신 저널리즘 이슈, 차별 및 혐오표현, 보도윤리, 언론중재제도 등 언론인 지망생에게 필요한 소양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예비 언론인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위원회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참석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의조정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교육 참석자들의 연수 집중도와 흥미를 높였다. 셋째, 언론중재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먼저 언론인 교육 시 언론분쟁예방 및 위원회 조정·중재제도 관련 프로그램 외에 시정권고제도 및 선거기사심의 등 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 법정 업무에 대한 교육 과정도 함께 제공하여 위원회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였다. 더불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 보도 관련 전문 교육을 <언론인 전문 연수> 및 <지역 언론인 워크숍>에서 집중 실시하여 바람직한 선거 보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언론인 대상 연수에서는 현직 지역 언론인 및 지역 저널리즘 트렌드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위원회 강의실이 마련된 부산·광주 외 지역의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등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 교육장에서 <언론인 전문 연수>와 <변호사 연수> 등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역사무소 주도의 연수를 진행하여 지역의 교육 운영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썼다. 또한 법조인 및 예비 법조인 대상 교육에서는 현직 부장판사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강사로 섭외하여 법조 전문 교육으로서 언론중재아카데미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넷째,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성(性) 차별 및 혐오, 차별 이슈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성(性)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언론보도를 살펴보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성(性)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인식 제고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여름방학에 실시된 예비 언론인 대상 교육 과정에서는 성(性) 평등성 제고를 위해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혐오와 차별 이슈를 언론이 재생산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소개하는 강의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인이 되길 원하는 대학생들이 성(性) 차별 및 혐오표현 등 새로운 양상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2020년에도 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교육과 지역 사무소 주도의 지역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신규 매체, 유튜브(YouTube) 및 기타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교육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변화되는 미디어 생산자와 뉴미디어 수요자들의 인격권 및 미디어 윤리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예정이다. 2019년 교육 대상별로 개편된 언론중재아카데미 과정에 맞춰 언론인, 법조인, 대학생, 청소년, 각급 기관 및 일반인 등 각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대상별 교안의 개선작업을 진행해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방법’, ‘여성혐오와 성(性) 차별 이슈’ 등에 대한 콘텐츠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용 교육 교재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소년용 교육 교재의 형식을 대폭 수정하여 교육 교재의 실효성 및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섭외, 홍보, 진행 등 교육 연수 전 과정을 지역사무소가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연수를 개설할 계획이다. 전국 10개 지역사무소가 지역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담당함으로써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사무처와 지역사무소 간 우수 교육 자료 및 조정·상담 사례의 상시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무소의 교육 전문성 및 강의 역량을 배가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장

언론피해구제제도 조사 · 연구

제 1 절

개 요

위원회는 디지털 중심의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떠오른 미디어 관련 인격권 이슈 등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 미디어 관련 법제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른 미디어 관련 법제 및 인격권 관련 이슈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계간지·학술지 등의 발간물과 토론회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결과물을 생산, 공개하고 있다.

계간 <언론중재>에서는 OTT와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매체 관련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는 한편, 범죄 피의자의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한 인격권 및 윤리적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통해서도 ‘혐오표현’, ‘가짜뉴스’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불거진 새로운 미디어 및 인격권 관련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해 학문적 성과로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위원회는 해외 각국의 언론법제 최신 동향 및 관련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언론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과 관련한 규제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18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와 주요 판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 언론법제 관련 학술연구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 및 급성장한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관련 법리의 형성 과정 및 국내·외 판례 등을 살펴보고자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충북MBC와 공동토론회를 개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허위조작정보와 선거보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 정착을 위한 선거보도심의기구 운영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제 2 절

주요 추진실적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가. 계간 <언론중재>

계간 <언론중재>는 1981년 창간된 위원회의 가장 오래된 발간물이자, 국내 언론법제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인용되고 있는 권위 있는 발간물이다. 위원회는 계간 <언론중재>를 통해 국내·외 언론법제 및 미디어 관련 최신 동향 및 위원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계간 <언론중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언론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시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계간 <언론중재>의 특집기획 코너인 ‘Focus on Media’에서는 언론, 미디어 분야의 최신 이슈 중 법·정책적 차원의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다루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유튜브 등 OTT(Over The Top)가 주된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음에 주목해 OTT 서비스의 현황, OTT를 둘러싼 통합방송법 등 관련 법안의 쟁점, 온라인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안, 국내·외 IT 사업자 간 역차별 쟁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하반기에는 범죄 관련 보도에서 파생되는 인격권 문제를 ‘피해자’, ‘피의자’, ‘취재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었으며, 시의성이 높았던 고위공직자 관련 피의사실공표와 언론보도를 둘러싼 쟁점 등도 살펴보았다.

【기간 <언론중재> 주요 내용】

호 수	주 요 내 용
2019년 봄호 (통권 150호)	<p>[Focus on Media: 매체환경의 변화와 OTT 현황 및 과제]</p> <p>(1) 국내 OTT 서비스의 지형 변화와 시장 전망 (최세경) (2) 통합방송법의 OTT 법적 쟁점과 과제 (최진웅) (3) 온라인 동영상 사례 연구를 통한 피해구제 방안 모색 (김보람)</p> <p>[사건 속 법률]</p> <p>한국의 포토리인 문화: 알 권리인가, 인격권 침해인가 (김창룡)</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국내 정보공개청구 환경과 데이터저널리즘의 역할 (김양순)</p> <p>[언론 관련 판례 동향 해설]</p> <p>최근 언론소송 판례의 흐름 - 피고 언론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권경원)</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p> <p>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1년, 혐오표현 규제책으로서의 평가 (심나리)</p>
2019년 여름호 (통권 151호)	<p>[focus on Media: 해외IT사업자의 성장세와 본격화된 역외규제 논쟁]</p> <p>(1)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국내시장 경쟁 및 서비스 현황 (곽규태) (2) 인터넷과 세계 시민: 국내외 사업자 간 역할별 쟁점과 국내 이용자의 대응 (이상기) (3) 한국 역외규제의 특수성과 역할별 해소 방안 (최진웅)</p> <p>[사건 속 법률]</p> <p>강화된 불법 음란물 차단 정책: 인터넷 사전 검열인가, 디지털 성범죄 방지책인가 (김승주)</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p> <p>英 온라인 피해 백서(The Online Harms White Paper)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연욱)</p>
2019년 가을호 (통권 152호)	<p>[Focus on Media: 최근 범죄 관련 보도와 인격권 문제: 3가지 입장과 3가지 쟁점]</p> <p>(1) '피의자'의 피의사실 보도와 무죄추정의 원칙 (원혜욱) (2)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논란 속 '취재원' 보호 (정신교) (3) 미투 운동 이후의 언론계 성인지 감수성 고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범죄 보도 (장윤미)</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5G와 저널리즘: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다 (조영신, 조형석)</p> <p>[사건 속 법률]</p> <p>세월호 참사 5년...재난보도준칙 마련 이후에도 반복되는 문제 (송중현)</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p> <p>일본의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에 관한 검토 (류지성)</p>
2019년 겨울호 (통권 153호)	<p>[Focus on Media: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 및 언론보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p> <p>(1)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공표와 쟁점 (김상겸) (2) 고위공직자 피의사실 보도의 기능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김태훈) (3)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 피의사실공표의 개선방안 (김재현)</p> <p>[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p> <p>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과 향후 과제 (정영주)</p> <p>[사건 속 법률]</p> <p>악성 댓글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가능성: 현 시점의 최진리법 담론과 대응을 중심으로 (심우민)</p> <p>[주목할 만한 해외언론법제]</p> <p>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의 합헌성에 관한 판단 (한동훈)</p>

또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코너를 통해 데이터저널리즘의 활용 현황 및 역할을 국내 정보공개청구 환경과 결부해 살펴보고, 포털사의 뉴스 편집 방침 개편, 5G 시대 새로운 저널리즘에 관한 전망,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과 미디어 '공공성' 문제 등을 다루는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저널리즘 및 미디어 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발 빠르게 분석·업데이트 하였다.

‘사건 속 법률’ 코너에서는 한국의 포도라인 문화를 둘러싼 법적 쟁점, 악성 댓글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 강화된 불법 음란물 차단 정책에 관한 논쟁, 재난보도준칙 마련 이후에도 반복되는 재난보도의 문제점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른 사회문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법적·윤리적 쟁점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주목할 만한 해외 법제(판결)’ 코너 및 해외통신원 제도를 통해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 시행 이후 혐오표현 규제책으로서의 평가, 혐한발언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일본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영국 온라인 폐해 백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의 합헌성에 관한 판단 등 해외의 최신 입법 동향과 주요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 전달하였다.

나.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위원회는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1년에 2차례 발간하고 있다. 2019년 위원회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뉴스를 기성 언론사처럼 생산하고 전파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의 구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 이를 학술적으로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투고 받은 논문 중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2019년 상반기에 발간된 제5권 제1호에서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혐오 표현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연구 주제로 선정, 논의하였다. 제5권 제2호에서는 탈 진실 시대의 페이크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5권 제1호는 기획논문 대주제를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미디어 역할”로 정해 혐오표현에 대한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젠더 갈등 관련 언론보도와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나타난 혐오표현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 등을 밀도 있게 살펴보았다. 제5권 제2호는 “탈진실 시대의 페이크뉴스(또는 허위조작정보·디스인포메이션)와 팩트체크, 그리고 인격권”을 기획 주제로 선정, 여론 형성에 있어 객관적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인 이른바 ‘탈 진실(post-truth)’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페이크뉴스의 법적 개념과 문제점, 페이크뉴스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피해구제 방안 등을 법적·제도적·학술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특히 제5권 제2호의 경우 기획논문 4편, 연구논문 8편이 투고되는 등 위원회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대한 언론법제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언론법제 관련 주요 학술지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위원회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미디어와 인격권에 관한 깊이 있고 다채로운 학술적 논의를 촉진, 장려하고자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각급 대학도서관, 언론 및 법학 관련 연구소와 기관, 언론학자 및 법학자를 비롯한 연구자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ac.or.kr>)에 논문 전문을 공개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9년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제5권 제1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기획 논문	고흥석	혐오표현물의 온라인 확산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
	윤성옥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김수아	미투 운동 이후 한국 신문에 나타난 성별 갈등 보도 분석
판례 평석	손형섭	【판례평석】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와 인격권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2019년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제5권 제2호) 수록 논문】

구분	저자	논문제목
기획 논문	조연하	방송보도의 객관성 심의결정 논리 연구 - 가짜뉴스(fake news) 판단기준으로서의 객관성 요소를 중심으로 -
	김민정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 가짜뉴스 규제 관련 국제 법안과 해외 대응책에 나타난 용어 및 개념정의 비교 -
	이완수	사람들은 왜 쉽게 속아 넘어가는가? -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살펴본 가짜뉴스의 심리학적 이론을 중심으로 -
연구 논문	정애령	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 - 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고찰 -
	심미선	자아존중감과 미디어 이용간의 관계 연구 - TV콘텐츠 이용과 인터넷 활동을 중심으로 -
	이승선	공영방송사 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에 대한 사업자의 전략적 봉쇄소송 - 방송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노조의 '징계무효확인' 청구를 중심으로 -
	권형돈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및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위원회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2018년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양질의 논문을 수록해 정기적으로 발행함으로써 등재지 선정을 위한 필요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20년에는 위원회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계속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등재지 승격을 위해 학술지 등재 심사 평가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는 한편, 학술적 전문성과 특수성이 높은 양질의 논문 게재를 위한 엄정하고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위원회는 2018년에 이어 언론법제 관련 각종 이슈에 대처하는 해외 각국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3호를 발간하였다. 특히 제3호는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언론법제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연구팀이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생산하였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3호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4개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이 담겼다. 소셜 미디어 등의 이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 온라인 환경 변화와 함께 혐오표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4개국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법적규제, 자율규제 현황, 그리고 각종 입법례·판례를 살펴보았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3호는 법원 자료실, 대학도서관 등에 배포되었으며 언론법제 및 언론피해구제제도에 대한 각국 현황 등을 점검·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위원회는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PDF파일과 E-Book으로 발간하여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신청 사건 현황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였다.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조정의 비공개 원칙과 사례집의 주요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요 사례만을 수록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정보와 당사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사건내용을 재가공한 후 작성, 게재하였다.

사례집에서는 조정·중재 통계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와 함께 법리적·학술적 의미가 있는 조정·중재사례 65건을 엄선하여 소개하였다. 주요 사례는 사건 처리결과를 기준으로 ① 정정보도 게재 17건, ② 반론보도 게재 9건, ③ 추후보도 게재 4건, ④ 손해배상 지급 15건, ⑤ 기사수정/열람·검색 차단 9건, ⑥ 후속보도 게재 등 기타 11건을 실었다. 쟁점 위주로 분석한 사례를 통해 각 사안별 다양한 피해구제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사례집을 이용하는 연구자, 일반 국민 등이 언론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피해예방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수록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 언론조정·중재 현황 -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 부록(연도별, 매체별 통계)	PDF, E-Book

마.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시정권고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발간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에는 2018년에 처리한 1,275건의 시정권고 결정안건 중 시의성이 있거나 대표성을 띠는 사례 30건을 선정하여 게재하였다. 특히 2018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슈로 제기되었던 ‘미투(me too)’ 보도 관련 시정권고 사례는 각기 다른 법익 침해 유형의 5개 사례를 선정하여 실었다.

법익 침해 유형별로는 개인적 법익 침해 사례로 사생활 침해 6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3건, 피해자·목격자 신원공개 2건, 성폭력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4건, 정신질환자 신원공개 1건, 북한이탈주민 신원공개 1건을 게재하였다. 사회적 법익 침해 사례는 보도윤리 위반 1건, 음란·포악·잔인 범죄묘사 2건, 범죄수법상세묘사 1건, 성(性) 관련 보도 1건, 자살 관련 보도 2건, 폭력 묘사 2건, 충격·혐오감 3건, 기사형 광고 1건을 게재하였다. 또한 별도로 시정권고 전체 목록을 수록하여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수록내용】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 시정권고 현황 - 주요 시정권고 사례 - 시정권고 전체 목록	PDF파일 및 E-Book

바.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

언론조정실무에 관한 각종 내부 규정 및 매뉴얼 등은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위원회는 각종 규정 및 실무가이드 등 언론조정실무 관련 주요 세부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한데 엮은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를 신규 발간하였다.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를 통해 언론조정실무 담당자들이 구체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근거로 언론조정실무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 수록내용 】

제 호	수 록 내 용	비 고
한 권으로 보는 언론조정실무 (2019. 12.)	-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 조정 및 중재절차 안내문 송부에 관한 예규 - 사건기록 작성가이드 등	책자, PDF파일

사.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통계 분석과 주요 판결 전문을 수록한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언론의 취재·보도 현장에서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하고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참고될 만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법 관련 주요 법리의 변화와 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는 언론 관련 민사판결 224건에 대한 통계 분석과 함께 명예훼손 사례 15건, 음성권 침해 사례 1건, 사생활 침해 사례 1건, 재산권 침해 사례 1건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 18건,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례 3건, 기사삭제청구 사례 등 7건 포함 28건을 주요 판결로 선정, 해당 판결문 전문을 수록하였다.

2. 토론회 개최

가. 토론회

위원회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새로운 유형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 관련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에 착안,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5월 8일 충북MBC와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충북MBC 「충북 시사토론 창」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권오근 위원회 사무총장, 김보람 중재위원(서울제5중재부, 법률사무소 해운 대표변호사), 김종후 크리에이터(후레이TV),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권오근 위원회 사무총장과 김보람 중재위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인격권 침해 등의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근 위원회 사무총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에 대한 현 국내 법제의 한계,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현황 등을 제시한 후 위원회 조정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보람 중재위원은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온라인 동영상의 각종 유형들을 검토하고, 이들 사례 바탕으로 현행 언론중재법상 조정중재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이 포섭 가능한지, 향후 온라인 동영상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반면, 김종후 크리에이터와 손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규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실제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자인 김종후 크리에이터는 국내 인터넷 방송의 성장배경, 수익구조,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사회가 현재 하나의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며 따라서 규제보다는 자율성 보장이 보다 필요하다는 토론을 펼쳤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일반 이용자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찾는 것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 기존의 일반적인 콘텐츠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표현과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도 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19. 5. 8.
장 소	충북MBC
프로그램명	「충북 시사토론 창」
주 제	【주제】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 - 진행: 구분상(충북MBC 아나운서) - 토론: 권오근(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김보람(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 변호사) 김종후(인터넷 개인방송 크리에이터)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2019년도 토론회】



나. 정책토론회

위원회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전파가 우려되는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태도는 무엇인지, 선거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들의 운영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허위조작정보와 선거보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2월 6일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선거보도 심의기구 관계자를 비롯해 유관단체, 학계, 언론계,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양승찬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서울제4중재부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시작은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선거보도 어떻게 달라져야하는가 - 정보오염 환경에서 전통 언론의 역할’ 제하의 발제를 통해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를 바로잡으려는 전통 언론의 행위 자체가 해당 정보를 재생산·확산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전략적 침묵(strategic silence)’을 통해 정보 오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 교수는 “전통 언론은 선거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정확하게 인용보도해서는 안 되며 선거 국면에서 차고 넘치는 ‘사실’ 중 쓸 가치가 있는 ‘사실’만을 선별해 보도하고 해당 사실에 대한 검증, 반박, 해석, 맥락 제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어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공정한 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선거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선거보도 심의기준과 심의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적, 형식적 측면의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매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선거보도 심의기구의 심의 기준과 관련하여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해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과 인터넷, 신문과 종속형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유통되는 경우에 대한 심의기준과 심의 과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교수는 “선거 기간 외에도 선거기사의 심의 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상 언론사들을 교육하는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대영 한국방송공사 선거방송기획단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민 위원회 심의2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선거보도에 대한 전통 언론의 역할과 관련하여 토론자들은 “전통 언론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정확성, 심층적 분석과 전문성, 투명성과 다양성을 통한 공정성 실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통 언론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정보 및 유해 콘텐츠를 처리하는 절차와 게시물 관련 알고리즘 등이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거보도 심의기준 및 심의기구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선거보도 심의 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심의기구 간 협의를 통해 공동 심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보도와 관련된 허위조작정보 혹은 거짓정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선거보도 심의기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다루는 언론분쟁 전문기구이자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언론중재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2019년도 정책토론회 개최현황】

일 자	2019. 12. 6.
장 소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주 제	<p>【대주제】 허위조작정보와 선거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양승찬(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서울제4중재부 중재위원) - 제1주제: 선거보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오염 환경에서 전통 언론의 역할 · 발표: 김민정(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제2주제: 공정한 선거보도 심의를 위한 심의기구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이용성(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대영(한국방송공사 선거방송기획단장) · 김유형(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 박아란(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 김동준(공공미디어연구소장) · 이부해(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승민(언론중재위원회 심의2팀장)
참석인원	선거보도 심의기구 관계자, 학계, 언론계,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

【2019년도 정책토론회】



다. 중재위원 연수

위원회는 2019년 5월 31일 ~ 6월 1일 이틀간 대전광역시 소재 유성호텔에서 전국 18개 중재부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중재위원 연수를 진행하였다.

2019년도 중재위원 연수에서는 정치·사회 전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합리적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한 언론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에 관한 실무적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대전중재부 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2019년도 중재위원 연수는,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서울제4중재부 중재위원)이 ‘가짜뉴스 실태와 팩트체크’를 주제로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짜뉴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의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팩트체크에 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최승재 변호사(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는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개선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발표를 통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4개월간 운영된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개선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소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참석 위원들은 ‘가짜뉴스’의 정의와 특성, ‘가짜뉴스’ 대응방안으로서의 ‘팩트체크’ 효용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참석 위원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통한 언론피해구제제도 효과 제고라는 관점에서 소위원회가 마련한 신(新)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재위원 연수를 중재위원의 언론조정실무 역량 배가를 위한 실질적인 주제를 논의하는 장(場)이자,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중재위원들의 중지(衆智)를 모으는 밀도 있는 행사로 개최·운영할 계획이다.

【중재위원 연수 개최현황】

일 자	2019. 5. 31. ~ 6. 1.
장 소	유성호텔 (대전광역시)
사 회	이승선 (대전중재부 중재위원)
주 제	제1주제 : 가짜뉴스 실태와 팩트체크 · 발제 : 정은령 (서울제4중재부 중재위원) 제2주제 : 손해배상액 산정가감표 개선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 발제 : 최승재 (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
참석인원	중재위원, 사무처 직원 등 64명

【중재위원 연수】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영

위원회는 언론법제 및 저널리즘 분야의 국내·외 단행본, 학회지, 판례집 등을 구비한 언론분야 전문 자료실을 운영하여 언론법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론조정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 약 200여 권을 지원받아 자료실에 비치, 언론법제 및 기타 학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한국학술정보(KISS)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학술자료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폭넓은 자료 접근 및 활용을 지원하였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 언론법제 전문 연구자 등의 연구와 학술 활동, 실무 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실을 정비하고 충실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실 보유 장서 등록 현황】

(2019. 12. 31. 현재 / 단위: 권)

구분	국내도서	국외도서	합계
2019년도 신규 구입	164	5	169
보유 장서	4,343	908	5,251

4.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 실시

위원회는 2019년 사무처 직원이 참여한 글로벌 언론법제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호주와 독일 및 영국의 위원회 유관기관을 탐방하고 해외 미디어 동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독일과 영국, 호주의 언론인, 언론법제 관련 전문가, 교수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국의 위원회 유관기관 현황, 각국의 주요 미디어 이슈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위원회에 제공하는 시사점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 3 절

평 가

위원회는 언론법제 연구·진흥, 국내·외 위원회 유관기관 및 관련 법·제도의 동향 파악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 발전방향 모색 등을 위해 조사·연구 문헌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토론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분쟁 및 피해구제제도 관련 전통적인 주제인 언론보도와 인격권에 대한 심층 학술논의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등장에 따른 새로운 권리침해 이슈, 혐오표현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미디어 관련 다양한 긴급 현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위원회는 토론회 개최방식에 변화를 주어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TV 토론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를 주제로 실시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인한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와 선거보도’ 정책토론회를 통해서도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시 국민의 정당한 투표권을 훼손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전파에 대비해 기존 언론의 바람직한 선거보도는 무엇인지,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운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밀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위원회는 계간 〈언론중재〉, 등재후보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등의 각종 학술발간물을 통해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미디어 생태계의 현황과 예상되는 인격권 관련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점검·검토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건 관련한 언론보도와 인격권 침해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발굴해 연구·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활발한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성과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나라 언론법제 연구 진흥 및 학술적 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통한 언론피해 구제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제 4 장

이용만족도 조사

제 1 절 개요

위원회는 위원회 장·단기 정책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 방안 마련, 언론조정중재제도 개선,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1차례 언론조정·중재 및 상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9년 이용만족도 조사는 (주)글로벌리서치를 통해 2019년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언론조정·중재신청사건 심리에 참석한 바 있는 신청인/피신청인(이하 신청인/피신청인) 492명(신청인 258명/피신청인 234명), 상담이용자 413명, 교육수강자 1,165명이었으며, 조사대상에 따라 온라인조사(신청인/피신청인), 전화조사(상담이용자), 현장조사(교육수강자)를 실시하였다.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는 책자 발간과 함께 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형태로 게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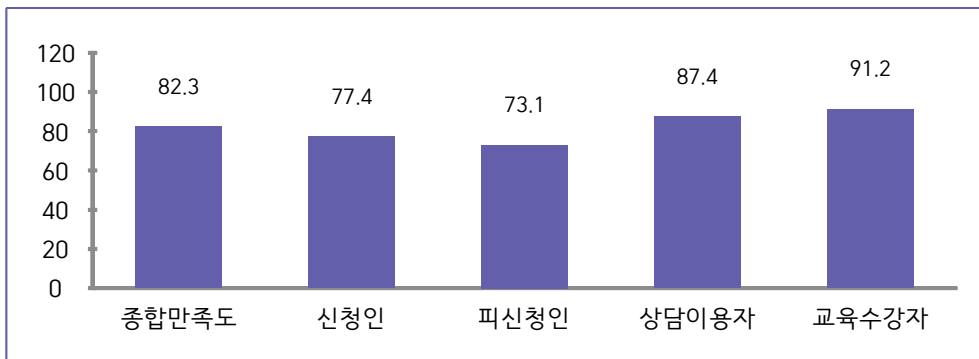
조사대상별 평가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종합만족도 측정을 위해 신청인/피신청인 공통으로 ‘심리 전 절차 안내’, ‘중재부의 심리진행’, ‘심리 후 절차 안내’ 등의 차원을 구성해 차원별 세부 항목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접수단계를 거치는 신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인 대상으로 ‘상담창구’, ‘조정(중재)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으며, 언론사 소속인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시정권고제도 인지도’, ‘시정권고제도 효과’,

‘적극적인 시정권고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종합만족도 측정 외에도 신청인/피신청인의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 위원회에 대한 이미지 및 인지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언론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위원회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이용자를 대상으로는 ‘상담원 친절성’, ‘상담원 경청 자세’, ‘문제해결 도움도’ 등 총 6개 항목을 구성해 종합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위원회 주관의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수강자를 통해서는 ‘주제 및 내용’, ‘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자료 충실성’ 등을 포함한 총 5개 항목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확인하였다.

【2019년도 전체 종합만족도 및 조사대상별 만족도】

(단위: 점)



제 2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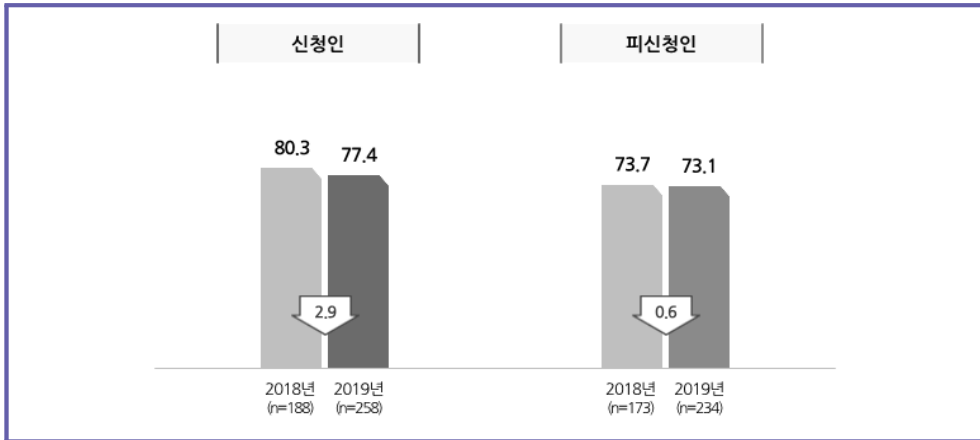
주요 조사결과

1. 신청인/피신청인 만족도 조사결과

2019년도 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7.4점으로 2018년 대비 2.9점 하락하였고, 피신청인 종합만족도는 73.1점으로 2018년 대비 0.6점 하락해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전년 대비 종합만족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신청인/피신청인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 안내’(82.6점) > ‘상담창구’(82.4점) > ‘심리 후 절차 안내’(77.1점) > ‘신청절차 및 방법’(76.2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72.5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차원별 만족도는 ‘심리 전 절차 안내’(79.3점) > ‘심리 후 절차 안내’(74.2점) > ‘중재부의 심리진행’(66.4점) 순이었다.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심리 전 절차 안내’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중재부의 심리진행’ 차원에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경우 ‘(인터넷신문 및 포털) 기사삭제’(73.1점) > ‘(구두 또는 서면) 사과’(67.9점) > ‘정정·반론·추후보도 등’(67.3점) > ‘손해배상’(63.9점)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경우 ‘정정·반론·추후보도 등’(65.5점) > ‘(인터넷신문 및 포털) 기사삭제’(65.1점) > ‘(구두 또는 서면) 사과’(56.3점) > ‘손해배상’(53.1점)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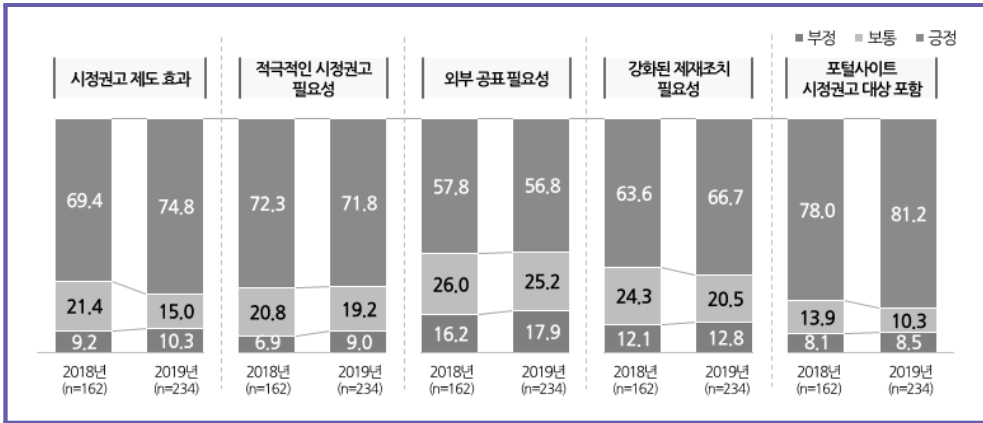
위원회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청인의 점수(75.4점)가 피신청인(68.4점)보다 높아 위원회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위원회 이미지 평가 항목 중 ‘국민의 인격권 보호’, ‘언론환경 발전에 기여’ 등의 항목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해, 위원회가 추구해 온 ‘인격권 보호와 언론자유라는 양 기본권의 균형 있는 조화’에 대해 당사자들 역시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위원회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의 91.1%가 위원회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위원회 재이용 의향에서는 대해서는 조사대상 신청인의 79.5%가 재이용 의향을 밝혔다.

한편 언론사 소속으로 현업에서 활동 중인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결과를 2018년과 비교한 결과, ‘시정권고제도 효과(69.4% →

74.8%)’, ‘강화된 제재조치 필요성(63.6% → 66.7%)’, ‘포털사이트 시정권고 대상 포함(78.0% → 81.2%)’ 등의 항목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상승하는 등 시정권고제도 전반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법의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정권고제도 운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의견(피신청인)】

[단위: %, Base: ()]



한편, 인터넷 기반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의 95.7%, 피신청인의 62.8%가 국민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 보완, 열람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플랫폼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의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 구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94.2%, 피신청인의 82.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한 매체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 마련, 새로운 미디어 채널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인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인터넷 기사 수정, 보완, 열람차단 요구 권리 필요성】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필요	보통	불필요
신청인	60.1	30.2	5.4	3.1	0.8	0.4	0.0	95.7	3.1	1.2
피신청인	16.7	27.8	18.4	17.9	3.0	7.3	9.0	62.8	17.9	19.2

【다양한 미디어 채널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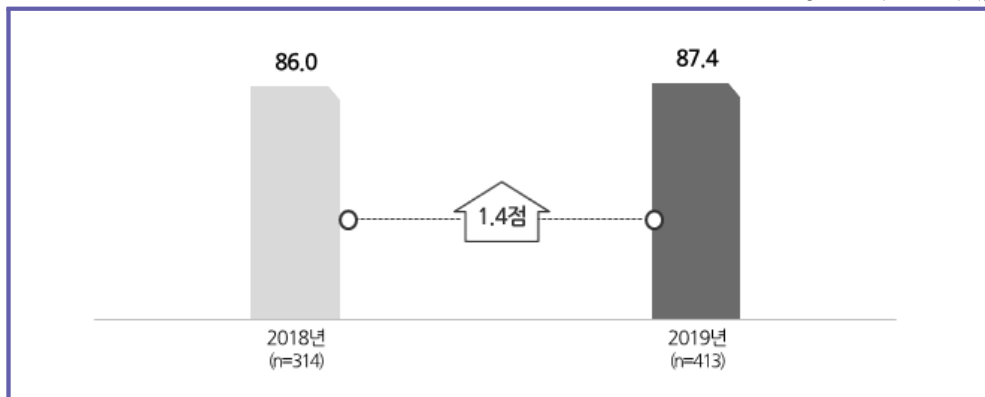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약간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필요	보통	불필요
신청인	66.3	23.3	4.7	3.9	1.2	0.0	0.8	94.2	3.9	1.9
피신청인	41.0	29.1	12.8	9.4	1.7	2.6	3.4	82.9	9.4	7.7

2. 상담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2019년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는 87.4점으로, 2018년 86.0점에 비해 1.4점 상승하였다. 항목별 만족도는 ‘상담원 경청자세’(89.7점) > ‘상담원 친절성’(88.5점) > ‘적극적인 상담’ / ‘신속한 상담’(88.3점) > ‘상담내용 신뢰성’(87.9점) > ‘문제해결 도움’(82.6점)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이용자 종합만족도】

[단위: 점, Ba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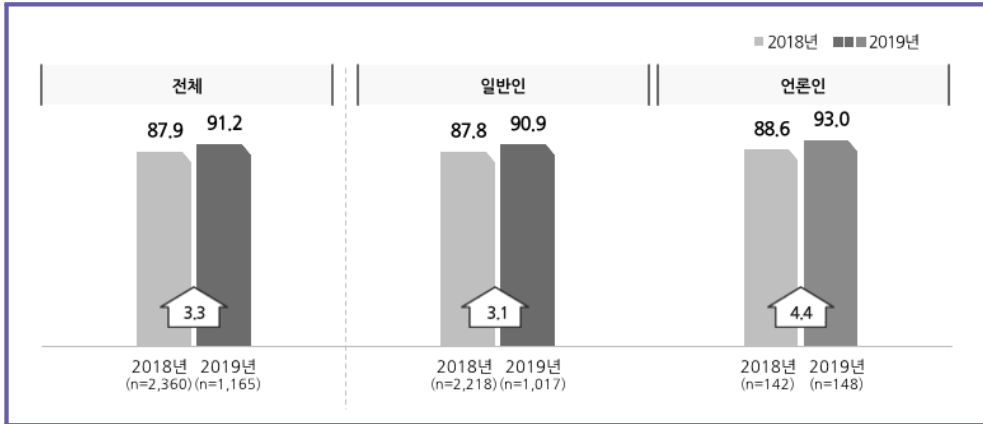


3. 교육수강자 만족도 조사결과

위원회가 주관하는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만족도는 91.2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인 수강자 만족도는 90.9점, 언론인 수강자는 93.0점으로 확인됐으며, 일반인 및 언론인 만족도, 종합만족도 모두 2018년에 비해 3점 이상 상승하였다. 항목별 만족도는 ‘강사의 성의 및 태도’(93.9점) > ‘사건/사례를 이용한 설명’ / ‘교육 자료의 충실성’(91.7점) > ‘제도에 대한 이해’(90.1점) > ‘주제 및 내용’(88.6점)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수강자 항목별 만족도 】

[단위: 점, Base: ()]



제 3 절 평 가

2019년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상담이용자와 교육수강자의 종합 만족도 상승이 눈에 띈다. 상담이용자에 대한 조사에서는 ‘신속한 상담’, ‘상담내용 신뢰성’ 등 모든 조사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하여, 상담이용자의 전반적 요구에 맞춰 충분한 업무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강자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비교적 큰 폭의 종합만족도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 ‘주제 및 내용’, ‘교육자료의 충실성’ 등에서 점수 향상 폭이 컸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의 충실성과 함께 질적 향상을 달성하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신청인/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종합만족도 하락폭이 피신청인의 종합만족도 하락폭보다 컸는데 ‘상담창구’, ‘신청절차 및 방법’ 차원의 만족도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신청인/피신청인에 대한 각 항목별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2019년 처음 실시한 개선효용도 분석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해서도 인터넷 기반 매체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기존의 피해구제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4) ‘개선효용도 분석’(IEA, Improvement Efficiency Analysis)은 개선 필요 과제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만족률, 불만을 그리고 중요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개선효용도’가 클수록 개선의 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피해구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마련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청인/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방법별 만족도 분석에서는 '(인터넷신문 및 포털) 기사삭제'로 피해구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넷 기사의 수정, 보완, 열람차단 요구 권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95.7%, 피신청인의 62.8%가 긍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다양한 미디어 채널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94.2%, 피신청인의 82.9%가 긍정 응답을 하는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위원회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 의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시정권고제도 효과', '강화된 제재조치 필요성' 항목에서 작년에 비해 긍정응답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시정권고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

홍보

제1절 개요

2019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및 모바일 중심 시대에 부응하는 홍보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접점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위원회는 홈페이지, 대외홍보지,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뉴스레터, 카카오톡 채널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해 위원회의 주요 업무, 언론보도와 인격권, 일상·시사 상식 등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 이용자들이 친근하고 편안하게 위원회에 다가설 수 있도록 대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동영상 공모전 개최, SNS기자단 운영, 위원회 캐릭터 이모티콘 배포를 통해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대외홍보지 콘텐츠를 위원회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와 관련된 소식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전파하는 등 위원회가 보유한 홍보매체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고 상승효과를 일으켜 홍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지하철 음성안내 광고, 서울신문사 전광판 및 KTX 부산역 전광판 옥외광고, 충북MBC 라디오 캠페인 등 투입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큰 매체를 활용하는 광고 전략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양한 이용자층이 보다 손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제 2 절

주요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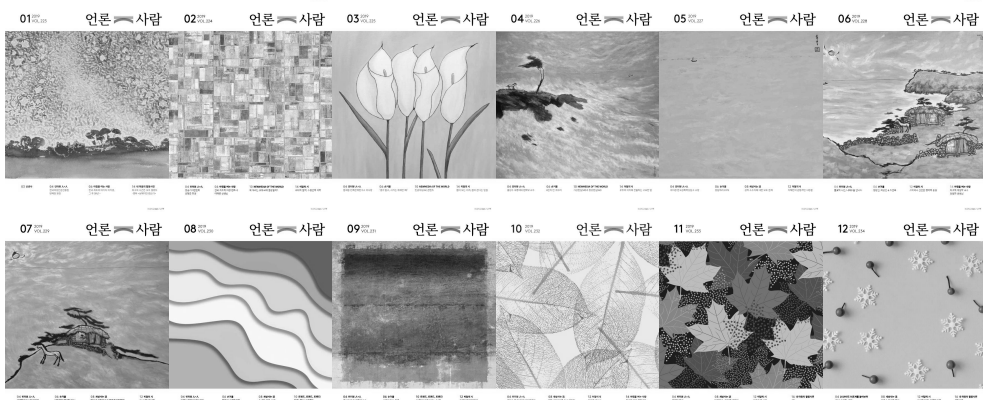
1. 대외홍보지 및 뉴스레터 제작

위원회는 최근의 미디어 및 언론법제 동향, 각계 각층 인물 인터뷰, 사회 트렌드 분석, 문화 콘텐츠, 위원회 뉴스 및 동정 등을 담은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을 발간(매월 3천 부)해 전국 법원, 대학, 도서관, 문화원,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2019년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성(性) 소수자, 성폭력 사건, 성별 등과 관련한 무분별한 비하나 혐오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혐오발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젠더 갈등 해소와 양성평등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물들을 조명하는 인터뷰를 기획, 꾸준히 이어나갔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및 발전과 함께 급증한 허위정보 전파, 혐오표현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인격권 관련 법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또한 독자들이 부담 없이 대외홍보지를 이용하도록 문화 콘텐츠의 내용도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대외홍보지 <언론 사람>은 콘텐츠의 도달 범위를 넓히고 손쉬운 이용을 돕기 위해 온라인 뉴스레터로도 제작해 매월 약 4,000명의 수신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게시한 콘텐츠가 네이버 모바일 스쿨잼 메인 화면에 소개되어 조회 수 4천여 건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2019년 발행 <언론 사람>】



2. 위원회 광고 집행 현황

위원회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음성안내광고를 확대하고 시청역사 내 안내표지판에 위원회를 명기하는 등 언론피해구제 관련 상담 및 언론조정신청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위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민원인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노출빈도 및 주목도가 높은 매체에 광고를 집중, 투입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였다. 서울신문사 뉴스전광판 광고에는 위원회가 주최한 동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을 활용하였으며, 12월에는 계절감을 고려한 ‘오해받은 산타’ 인포그래픽 영상을 사용하여 광고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연휴시즌에 맞춰 KTX부산역 전광판 광고를 진행하고, 충북 지역에서는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광고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매체광고 집행내역】

구분	매 체 명		집행기간	비고
서울	지하철 음성 안내광고	2호선 시청역	4. 16. ~ 9. 15. (5개월)	7초 음성안내
	서울신문사 뉴스전광판		9. 15. ~ 12. 31. (3개월)	12m×9m, 양면
	월간 <현정>		9월호 ~ 11월호	
지역	충북MBC 라디오		6. 1. ~ 9. 30.(4개월)	40초 캠페인
	KTX 부산역 전광판		7. 1. ~ 7. 31.	

【서울신문사 전광판 광고(좌) / 시청역사 위원회 안내표기(우)】



3.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 홍보활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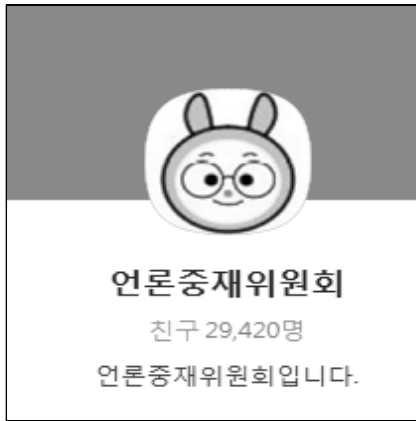
위원회는 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친근하고 편안한 위원회 이미지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기반의 공식 블로그 '공감'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위원회 관련 주요 소식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최신 미디어 이슈, 언론법제에 관한 다양한 쟁점 등을 웹툰, 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등의 형식을 활용해 알기 쉽게 제작,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미디어 등을 통해 전파되는 젠더 격차 문제, 다문화 가정 차별 등 각종 차별과 관련한 다각적인 콘텐츠를 제작, 전달하여 우리 사회에 산재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주관한 '2019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위원회 블로그가 콘텐츠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공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9년에는 누적 순방문자 수 1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위원회 공식 블로그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원회 대표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9년 위원회 공식블로그 월간 평균 방문횟수는 27,057건, 월간 평균 조회 수는 33,515건을 기록했으며,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수도 28,000여 건을 기록하였다.

【네이버 메인에 게시된 블로그 콘텐츠(좌) / 2019년 블로그 어워드 장려상 수상(우)】



한편 위원회는 모바일 중심 시대의 맞춤형 홍보를 위해, 위원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적극 활용해 위원회 대외홍보지 발행 소식, 블로그 이벤트 등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캐릭터인 어니 이모티콘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이용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위원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증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9년 발행한 어니 이모티콘은 배포 수 시간 만에 준비수량이 모두 소진되었고 어니 이모티콘을 수령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이모티콘 판매 요구가 잇따르기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받는 위원회의 주요한 모바일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좌) / 2019년 캐릭터 이모티콘 (우)】



4. 국민 참여형 홍보 활동 전개

위원회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홍보 활동으로 진행해 온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 운영에 변화를 꾀하였다. 2019년 <제5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은 위원회에 대한 SNS 기자단의 이해도를 더욱 높여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3개월씩 운영했던 운영 방식을 한 번에 12명을 선발해 6개월 동안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제5기 언론중재위원회 SNS 기자단>은 위원회 각종 제도를 쉽게 알리는 내용을 비롯해 최신 미디어 이슈 관련 주제로 수준 높은 기사와 영상물을 작성했으며, 해당 콘텐츠들은 위원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우수기자상을 받은 김은영 SNS 기자의 글은 단일 콘텐츠로 조회 수 7,100건을 넘기기도 하였다.

【제5기 위원회 SNS 기자단 운영】



또한 위원회는 '2019년 제4회 위원회 공모전(동영상)' 개최를 통해 위원회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고 심사 및 수상작 발표 등 전 과정에도 일반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직·간접적인 대국민 위원회 홍보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수상작은 위원회 직원 및 외부 심사위원 평가에 더해 2,600여 명이 참여한 네티즌 투표 점수까지 합산하여 선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사 및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24편의 우수한 콘텐츠가 제출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최종 5팀(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2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4회 위원회 공모전 수상작은 위원회 동영상 광고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됐다.

【제4회 위원회 공모전(동영상) 대상 수상작】



5.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2019년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반 PC는 물론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레이아웃과 메뉴를 개선했으며, 언론중재아카데미 섹션을 전면 개편하여 교육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 전자신청시스템을 개편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속히 언론조정신청을 원하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개편한 위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6. 미디어 퍼블리시티 및 사료 관리

위원회는 2019년 위원회 업무 및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언론사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정책토론회 및 지역언론사 간담회 개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등 위원회 주요 업무에 관한 13건의 보도자료에 대해 총 201회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주로 위원회 사료의 저장 및 보존에 활용되어온 디지털전시시스템(KIOSK)을 조정심리대기실에 배치하고 홍보영상 게시, 내방객 심리일정 안내 등에 활용하여 위원회 홍보 및 조정실무 지원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위원회 사료선정위원회는 2019년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 7건을 신규 지정하고, 역사적 보존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사료 18건은 사료 지정을 해제하였다.

제 3 절

평 가

2019년 위원회 홍보는 인터넷 기반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각종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하는 콘텐츠 개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 역량을 투입하였다.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모바일 홍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적극 활용하였다. 아울러 대외홍보지와 위원회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성(性) 소수자,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한 혐오표현 및 명예훼손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 내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콘텐츠도 기획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위원회 광고 및 홍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기존에 진행하였던 지하철 음성안내 광고를 확대하였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 당사자들에게도 소구하기 위해 부산, 충북 등에서 지역광고를 집행하였다. 또한 위원회 캐릭터 어니 이모티콘을 2019년에도 제작·배포하고, 대외홍보지 콘텐츠를 위원회 공식 블로그 및 위원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홍보하거나, 공모전 수상작을 전광판 광고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홍보기법 활용 및 홍보수단 간 선순환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아울러 대국민 동영상 공모전 실시, 대학생 SNS 기자단 운영 등은 이용자가 직접 위원회 관련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 위원회를 바라보고 위원회 및 언론피해구제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홍보의 중심에 이용자를 두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고 접하길 원하는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의미, 언론조정·중재제도의 기능과 역할 및 신청 절차, 언론보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현상 관련 정보, 문화적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기획·제작해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방향을 설정,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홍보채널 발굴 및 이에 최적화 된 콘텐츠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입 비용 대비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 홍보채널 간 유기적인 연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 6 장

기사심의시스템 구축 및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위원회는 시정권고 및 선거기사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0년 구축한 직원 그룹웨어의 편의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디지털 기사심의시스템 구축 및 그룹웨어 시스템 개편' 등을 위한 TFT'를 꾸려 2019년 1년간 기사심의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직원 그룹웨어를 고도화하였다.

제 1 절

시스템 구축개요

1. 심의시스템 구축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수행하는 시정권고 업무 및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각각 시정권고시스템과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이하 심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심의시스템은 모니터링 안건, 회의자료, 결정문 등 그동안 오프라인 문서로 처리해 온 시정권고 및 선거기사심의 관련 행정문서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심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건을 공유하고, 통계 및 심의 매체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사례 검색 등이 가능해지면서 심의 업무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신속하고 간편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특히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의 경우 종이 문서를 접수받아 처리하던 후보자 시정요구 등 신청 안건을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함으로써 불공정 선거기사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위원회 사무처 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0년 구축된 직원 그룹웨어는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시스템의 토대가 Non-Active X 환경에 맞지 않거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충족하지 못하고, 브라우저별 호환성이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직원 그룹웨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전 구축되어 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점이 발생하는 등 고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신규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입각하여 물리적인 공간 제약 극복, 노후 하드웨어 교체, 웹 표준 상용솔루션 도입 및 Non-Active X로 대표되는 멀티브라우저 환경 구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목표로 직원 그룹웨어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제 2 절

개발 경과 및 성과

1. 심의시스템 구축

심의시스템은 개발 요구사항 분석 3개월, 화면설계 등 시스템 사이트 구축 2개월, 사전 테스트 2개월 등의 과정을 거쳐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기사심의 시스템은 2019년 12월 16일 출범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시부터 본격 운용을 시작했으며, 시정권고시스템은 역시 2019년 말부터 운용을 시작하였다.

【 심의시스템 개발 추진 경과 】

일정	주요내용
2019년 3 ~ 5월	시스템 메뉴 구성 및 개발 요구사항 분석
2019년 6 ~ 8월	시스템 사이트 구축 및 화면설계
2019년 9 ~ 10월	사전 테스트

시정권고시스템 운용을 통해 종전보다 신속한 심의 안전 공유 및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서식을 활용한 안전 작성, 문서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결정문 작성 등을 통해 시정권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선거기사심의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선거 시기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선거기사 관련 모니터링 안전을 실시간으로 공유, 상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불공정 선거보도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선거기사 심의시스템과 연계된 온라인 신청 페이지도 개설하여 후보자 시정요구 신청 안전 등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선거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심의시스템 온라인 신청 메인페이지 】



2.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는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비 교체 및 이관,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2019년 9월 9일 오픈한 뒤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19년 11월 29일 고도화를 마무리하였다.

【그림웨어 고도화 진행사항】

일정	주요 내용	범주
1월 ~ 2월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사업 계약	-
3월 ~ 4월	요구사항 분석	-
5월	외부 접속을 위한 SSL VPN 장비 설치(5.29)	시스템 설계
6월	전송구간 암호화를 위한 SSL 인증서 발급 및 DB 장비 교체, 이관	시스템 개발
7월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계약 체결	시스템 개발
8월	신규 그림웨어 1차 교육 실시(8.26)	시스템 개발
9월	신규 그림웨어 2차 교육 실시(9.4) 그림웨어 오픈(9.9)	시스템 테스트
10월 ~ 11월	시스템안정화 및 검수(11.29)	시스템 안정화

제 3 절 평 가

1. 심의시스템 구축

심의시스템 구축으로 모니터링 안건 작성부터 회의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속한 안건 공유 및 체계적인 안건 관리, 사후 처리, 통계 등 업무 일체를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처리하고, 관련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시정권고 및 선거기사심의 관련 행정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아울러 심의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축적되는 심의 안건 및 회의결과는 향후 심의 업무의 일관성 있는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축적된 심의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연구·분석을 통해 심의 관련 법·제도 개편, 심의 업무 환경 개선, 심의 관련 인력 전문성 강화 등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심의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한 추가 개발 필요 기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심의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를 통해 기존 인터넷 데이터 센터 내 물리 공간에서 이루어진 데이터 처리 환경을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대체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 및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멀티브라우저가 가능해졌으며, 시스템 접속자의 접속 기록, 비밀번호 오입력 횟수 제한 등의 장치를 추가하여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개인 정보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직원 그룹웨어 시스템이 구축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IT 기술을 반영하여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구현, 업무 능률을 향상시켰다.

【그룹웨어 고도화 성과】

구분	항목	세부항목
1	클라우드	SK CLOUD Z 환경으로 이관
2	DB서버	신규 ODA로 SK CLOUD Z 환경에 설치
3	그룹웨어	HTML5 준수한 GW 도입
		Non Active-X 환경 및 멀티브라우저 가능
		모바일 그룹웨어 개발
4	상용SW	Non Active-x 환경 구현 PDF 변환, 리포팅툴, 공인인증 툴킷, 키보드 보안 정상 설치
5	인터페이스	멀티브라우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조사관업무시스템 등과 연동 확인
6	데이터	기초 데이터 구축
		구 그룹웨어 데이터 이관

향후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그룹웨어 운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장치 마련 등의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7 장

기타 주요활동

제 1 절

개 요

1. 해외언론평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위원회는 해외언론평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의 언론사 및 유관기관을 방문해 언론 현황을 살피고 언론피해구제 및 고충처리 제도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뉴욕의 미디어법률자원센터(Media Law Resource Center, 이하 MLRC)와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이하 NYT), 워싱턴 D.C.의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를 찾아 관계자와 면담하면서 한국의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소개하고 미국의 언론과 피해구제 제도 현황 조사 및 정보 수집·교환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위원회 방문단은 MLRC의 Jeffrey P. Hermes 부센터장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 언론 관련 분쟁의 최근 추세 및 주요 사례를 전해 듣고, 변화하는 미디어 정책 방향과 언론관계법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NYT에서는 David McCraw 부사장 겸 법률고문 및 Michael Slackman 국제부문 편집국장과 만나 NYT의 독자 고충 처리절차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ABA에서는 분쟁해결분과 대표단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미국의 조정·중재 등 ADR 분야 현안을 검토하는 한편,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ADR 활용 현황을 공유하였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제정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제1조의 영향 아래, 미국은 언론 관련 분쟁에 관한 인식부터 이를 해결하는 양태, 관련 법규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적 기반을 형성해 왔다. 언론의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지배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방문단이 소개한 한국의 언론피해구제절차는 방문기관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MLRC 방문】



【NYT 방문】



【ABA 방문】



앞으로도 위원회는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각국의 언론법제 관련 연구자료, 판례 등을 축적해 나가고 혐오발언, 허위조작정보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 유일의 언론분쟁해결제도인 언론조정·중재절차를 해외 우수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현황】

방문단	기간	방문지	방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석형 위원장 - 최영훈 전복사무소장 - 한병훈 조사2팀 대리 	2019. 3. 10.~ 2019. 3. 17.	미국 (뉴욕, 워싱턴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법률자원센터 (Media Law Resource Center) -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 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 주 워싱턴 한국문화원

2. 국제컨퍼런스 협력

위원회는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019년 방콕 국제컨퍼런스 - 아시아의 가짜뉴스와 선거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ke News and Elections in Asia)'에 참석하여 아시아 가짜뉴스 대응 현황, 선거 시 허위정보를 막기 위한 팩트체크 사례 등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 제도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2019 ANPOR 연례컨퍼런스'(2019 Asian Network for Public Opinion Research Annu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양상에 대한 각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컨퍼런스 참가 현황】

구 분	내 용	
행 사 명	2019년 방콕 국제컨퍼런스 (아시아의 가짜뉴스와 선거에 대한 국제컨퍼런스)	2019년 ANPOR 연례컨퍼런스
일 정	2019. 7. 10. ~ 13.	2019. 11. 6. ~ 10.
장 소	태국 방콕	태국 치앙마이
주 제	가짜뉴스의 역사, 사회적 영향 및 방지를 위한 법안 등 가짜뉴스와 국가권력,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	글로벌화 되는 여론과 다문화 소통의 힘
참 석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제4중재부 박병태 중재부장 - 서울제3중재부 김선중 중재위원 - 부산중재부 김은경 중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제6중재부 장윤미 중재위원 - 광주중재부 윤석년 중재위원

아시아센터(Asia Centre)가 ‘아시아의 가짜뉴스와 선거’(Fake News and Elections in Asia)를 주제로 개최한 태국 방콕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등 아시아 각국의 언론 현실,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국민 인식 및 규제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발표됐다. 아울러 태국 총선 당시 유포되었던 가짜뉴스와 팩트체크 등을 통한 태국의 대응 사례가 관심을 끌었고,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발표도 이루어졌다. 한편 컨퍼런스 주관 기관인 아시아센터(Asia Centre)와의 간담회에서는 언론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하는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가 큰 관심을 끌었으며, 향후 아시아 각국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언론조정중재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는 기회 제공 및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19년 방콕 국제 컨퍼런스 참석】



한편, ANPOR(Asia Network for Public Opinion Research · 아시아조사연구학회)와 APCA(Asia-Pacific Communication Alliance,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연합)가 공동 개최한 연례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화 되는 여론과 다문화소통의 힘’을 주제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여론 형성의 변화 양태와 문제점, 대중의 담론에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각국 참석자들과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인터넷 기반 미디어 환경이 여론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의 해결책 중 하나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가 제시되어 위원회 언론중재아카데미 교육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2019 ANPOR 연례컨퍼런스 참석】



앞으로도 위원회는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사업 및 국제 컨퍼런스 참석 등 국제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각국에 우리나라 언론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관련 주요 흐름과 핵심 이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 미디어 이슈 관련 논의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

위원회는 지역언론사 대표를 초청한 간담회 4회(대구, 대전, 강원, 부산),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간담회 1회 등 총 5회의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언론사 최고책임자와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지역 언론 현안 청취,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와 협조 당부, 기사심의 및 언론인 교육 등과 관련한 의견 교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지역언론인 및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제도 마련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언론 현안에 대한 공유와 언론인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위원회는 4월 1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조정·중재절차 이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론 조력을 위해 조정·중재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1개 지역 60명의 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단’으로 위촉되었다. 위원회는

① 법률지식 및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조정·중재 절차에서 출석 및 진술이 곤란한 사람, 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 ③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④ 심신장애자, 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이 위원회 조정·중재 신청과정에서 변론 조력을 요청할 경우 자문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연결하여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MOU)체결 】



5. 혐오 및 차별 표현 배제에 중점을 둔 교육 실시

2019년 위원회 직원 교육은 법제 교육을 포함한 기본 소양 증진 교육부터 직무능력 향상, 어학 능력 개발, 업무 관련 학위취득 지원, 법정 의무교육까지 다양한 방안을 아وجل렀다. 특히 2019년 직원 교육에서는 우리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혐오와 차별 표현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에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통해, 각종 차별과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어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는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아닌 동반과 상생의 존재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위원회 내 성(性) 고충상담원 심화교육과 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한 ‘조직문화개선’ 토론회를 통해, 직장 내 혐오·차별 표현 및 부적절한 성(性) 관련 표현, ‘갑질’ 등에 따른 문제점과 해약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등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토론 활동을 실시하였다.

한편 위원회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많아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무 관련 교육(규정 제·개정안 작성 실무 교육, 계약업무일반 등) 및 교양 교육 등을 실시, 직원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직원 주요 교육 실시 현황 】

구분	날짜	주제	강사
폭력예방	6. 20. ~ 7. 3.	4대(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폭력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온라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性) 고충 상담원 실무	6. 13. ~ 6. 14.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애인인식개선	8. 19. ~ 9. 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온라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폭력예방	11. 13. ~ 11. 26.	4대(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폭력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온라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인정보보호교육	11. 7. ~ 11. 2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업무용 PC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설정하기 (온라인)	행정안전부
교양 교육	11. 20.	그대를 듣는다 (시를 읽은 그대에게, 그 두 번째 이야기)	정재찬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그 밖에도 2019년에는 언론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위원회 언론조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하는 연구모임인 ‘언론판례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 연구모임 활동현황 】

연구모임명	활동내용
언론판례연구회	- 국내 언론 관련 리딩 판례 및 최신 판례 연구 - 주요 언론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적 토의

6. 사회공헌활동

위원회는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취약 계층에게 위원회 구성원이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하였다. 또한 위원회 사회공헌활동의 폭을 넓혀 자연환경 정비, 입양대기아동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난지생태습지원 나무 심기 및 유해식물제거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 정비 및 생태계 보존에 나섰으며, 사회복지재단 동방사회복지회가 주관하는 입양대기아동 물품 지원 사업인 ‘엄마 상자 만들기’에 참여해 분유와 기저귀를 각각 160개씩 현물로 기부하였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는 공익 보호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난지생태습지원 나무 심기 및 유해식물제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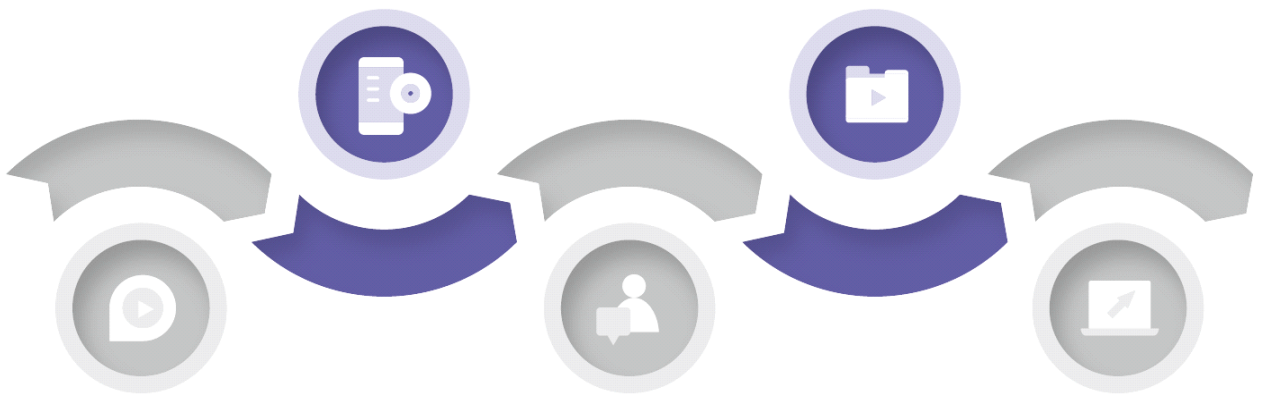


【'사랑의 빵 나눔터' 봉사활동】



【2019년 사회공헌 활동】

일 자	내 역	지 원 처	지원금액(원)
2019. 5. 24.	난지생태습지원 나무 심기 및 유해식물제거 활동	녹색미래 (서울시 난지한강공원생태습지원 위탁 운영)	무료 봉사
2019. 12. 4.	입양대기 아동 물품 지원	동방사회복지회	4,000,000
2019. 12. 17.	'사랑의 빵 나눔터' 제빵 활동	대한적십자사	500,000



제4부 2020년도
업무계획

제 1 장

2020년도 위원회 대내외 환경요인

1. 언론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시급

-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 기반 매체로 인한 언론분쟁 증가 추세 지속

【최근 5년간 매체별 조정신청 비중 현황】

매체유형*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면매체	775 (14.8%)	589 (18.6%)	403 (12.5%)	470 (13.2%)	474 (13.4%)
방송매체	892 (17.1%)	423 (13.3%)	361 (11.2%)	331 (9.3%)	436 (12.3%)
인터넷매체	3,553 (68.0%)	2,156 (68.0%)	2,464 (76.3%)	2,756 (77.4%)	2,630 (74.2%)
기타	7 (0.1%)	2 (0.1%)	2 (0.0%)	5 (0.1%)	4 (0.1%)
합 계	5,227	3,170	3,230	3,562	3,544

* 지면매체: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 / 방송매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IPTV
 인터넷매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포털, 방송사닷컴 / 기타: 정보간행물, 팟캐스트 등
 ※ 세월호 관련 대량 사건을 제외할 경우 2015년은 3,319건

- 위원회는 인터넷 매체 특성에 맞는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2019년 ‘열람차단청구권’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하였으나, 제20대 국회가 2020. 5. 말로 종료되는 만큼 현재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제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

- 언론조정신청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재부 증설을 위한 중재위원 증원이 가로막혀 있어 여전히 법정처리 기한인 14일을 넘기고 있음. 또한 중재부 부재(不在) 지역(ex. 인천광역시)의 경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중재부 설치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최근 5년간 언론조정신청사건 평균처리일수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평균	37일	21일	24일	23일	19일
전국평균	33일	19일	22일	21일	18일

- 2019년 국정감사에서 중재위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지적(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있었고, 중재위원 정수를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된 상황
- 인터넷 기반 매체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해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및 중재위원 정수 증원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 있음

2. 인터넷 기반 신(新) 유형 미디어의 권리침해 이슈 지속 발생

-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등 신(新) 유형 미디어를 통한 뉴스 유통과 관련해서도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뉴스 유통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2018년 15건, 2019년은 12월 기준 20건
- 언론관계법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OTT(유튜브 등), SNS(페이스북 등) 등의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를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관계법에 어떻게 정의하고 담아낼지 등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논의와 더불어, 신(新) 유형 미디어 대상 청구사건의 조정 과정 및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 필요
-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OTT(Over The Top) 동영상서비스와 관련, 이를 「방송법」 적용대상으로 포섭하여 법적 지위 및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1707(2019. 7. 29.)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특히 2020년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등이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신(新) 유형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제도적, 학술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의 필요

3. 시정권고 심의제도 실효성 제고 요구 증가

- 위원회 대상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이 시정권고 심의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

【시정권고 심의제도 관련 2019년 국정감사 질의 내용】

위 원 명	질의요지
〈김재원 의원〉	시정권고 결정을 했음에도 수정·삭제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도가 많고,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위원회 대책 필요.
〈박인숙 의원〉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이고 선정적 기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권고 역시 사후적 조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시정권고의 효력이 과도할 경우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제도 운용에 신중함이 요구되기는 하나, 시정권고 결정의 효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 필요

4.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2020년 재·보궐 선거 실시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2020년 재·보궐 선거가 2020. 4. 15. 치러질 예정.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한 선거보도 환경 조성에 기여 노력 필요

【2020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일정】

구분	선거일	설치·운영기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 4. 15.(수)	2019. 12. 16.(월) ~ 2020. 5. 15.(금)
2020년 재·보궐선거		2020. 2. 15.(토) ~ 2020. 5. 15.(금)

-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의 형평성·일관성·효율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속추진 필요

5. 그룹웨어 및 디지털 심의시스템 조기 안정화

-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및 디지털 심의시스템 신규 구축에 따른 안정화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업무 불편 최소화 필요
- 2020년에는 조사관 업무시스템, 중재위원 업무시스템 및 전자신청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정중재업무 능률성 증대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

6. 사무처 인적 자원 구성 및 배치 변화

- 지역사무소 소장 파견 확대, 신규직원 채용, 임금피크전문직 전환 등 사무처 인적 자원 구성 및 배치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직원의 재배치 및 업무 조정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제 2 장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1. 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조정신청사건 처리의 실효성, 신속성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지속 추진
 - 인터넷 기반 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노력 지속 추진
 - 언론조정신청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중재부 미설치 지역 당사자들의 편리한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중재위원 정수 증원을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
 - ‘열람차단청구권’ 및 ‘중재위원 증원’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향후 제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상임위 구성 완료와 동시에 국회, 정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 및 소통 추진
- 인터넷 기반 신(新) 유형 미디어의 권리침해 해소방안 논의
 - 소셜미디어, OTT 등 인터넷 기반 신(新) 유형 미디어와 관련해 국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에서 진행되는 학술적, 실무적 논의를 충실히 검토하는 한편, 위원회 주관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서도 인터넷 기반 신(新) 유형 미디어가 새롭게 발생시키는 권리침해 문제 관련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
 - 유튜브, 페이스북 등 신(新) 유형 미디어를 통한 뉴스 유통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논의와 함께 조정실무 차원에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

- 중재부 증설, 지역사무소 인력 강화를 통한 언론피해구제 편의성 제고
 - 중재부 부재(不在)에 따른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이동 불편 등 권리구제 방해 요소를 제거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언론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위원 정원 증원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노력 지속 추진
 - 지역사무소 인력을 확대하여 지역 당사자들이 상담부터 조정신청서 접수, 심리 까지 언론분쟁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

2. 바람직한 언론문화 조성 and 실효적인 심의제도 운영을 위한 심의시스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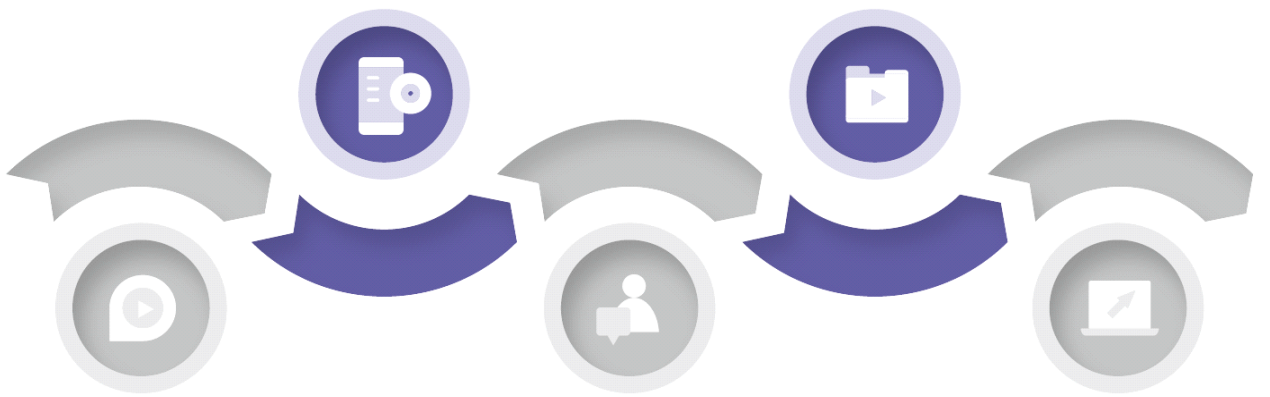
- 시정권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및 교육 강화
 -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언론사 수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언론사 수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노력
 -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언론단체 등과 공동으로 시정권고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진행 추진
- 디지털 심의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통한 심의 업무 효율성 제고
 - 디지털 심의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사심의 및 선거기사심의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디지털 심의시스템을 통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화를 조기에 완료하여 심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속 추진
 - 2019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상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발의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선거 제도 변경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등의 변수로 제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
 -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 설치·운영 기간이 따름에 따라 지적되어 온 선거 보도 심의의 형평성·일관성·효율성 문제 해결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용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이 심화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관계로 과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선거가 공정한 언론보도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
 - 선거 이후에는 선거보도 관련 주요 쟁점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문제점 등을 정리하는 간담회 개최, 백서 제작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보다 발전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

3. 미디어 환경 변화 · 이용자 요구에 발맞춘 교육 · 연구사업 진행

- 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교육 운영
 -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이동하고 인터넷 기반 언론 매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인터넷 기반 신규 매체,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인터넷 기반 매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언론 유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에 참여한 바 있는 기관 · 단체의 재교육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령 · 직군 등에 특화된 콘텐츠와 시의성 높은 최신 조정 및 소송 사례를 반영한 교육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재 구성 및 교육 과정 개선을 통해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무소 주도의 맞춤형 지역 교육 · 홍보 추진
 - 지역사무소 중심으로 각 지역의 언론 지형, 언론분쟁 양상 등에 부합하는 교육 및 홍보콘텐츠를 제작 · 활용하여 지역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교육 · 홍보 실시
 - 이를 위해 지역사무소 상주 인력에 대한 정기적 조정실무교육 실시, 서울사무처 및 지역사무소 간 조정사건처리 관련 중요 정보 상시 교류 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콘텐츠 제작 노하우 공유 등을 병행 실시하여 지역사무소 상주 인력 역량 강화 추진
- 미디어 관련 이슈 선제적 논의 진행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 · 후로 각종 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이에 대한 팩트체크 논의, 선거 여론조사보도 관련 공정성 · 형평성 이슈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제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에는 OTT 규율을 포함한 「통합방송법」 논의,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혐오표현 및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 언론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등 다양한 법 · 제도적 논의가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전망
 - 이와 관련해 국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이 마련하는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주요 미디어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각종 발간물(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계간 <언론중재> 등)과 위원회 주관 세미나 · 토론회를 통해 선제적 논의를 진행
 - 해외언론피해구제기구 교류협력 사업 및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언론조정 · 중재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 아울러 글로벌 미디어 관련 주요 흐름과 핵심 이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국내 미디어 이슈 관련 논의에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4. 자원 관리 · 운용 효율성 확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 효율적인 인적 자원 운용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
 - 지역사무소 소장 파견 확대, 신규직원 채용, 임금피크전문직 추가 편입 등 사무처 인적 구성에 변화 예상
 - 적재적소 인적 자원 배치, 경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직무 부여, 신규채용 인력 집중 직무 교육,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업무 능력 및 성과 제고 추진
 - 담당 업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복·낭비성 업무 등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 전자업무시스템 조기 안정화를 통한 업무 능력 제고
 - 2019년 직원 그룹웨어 고도화 및 디지털 심의시스템 신규 구축이 완료되었고, 2020년에는 조사관 업무시스템, 중재위원 업무시스템 및 전자신청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예정
 - 전자업무시스템 개발 부서와 운용 부서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각의 시스템 연동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추가 개발 필요 사항은 초기에 반영하여 구현하는 등 전자업무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통해 법정 업무 및 일상 업무의 능률성 제고 노력



부 록

위원회

업무현황

1. 임원 및 중재위원 명단

(2019년 12월 말 현재)

임원	
성명	주요경력
 위원장 이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현) 변호사
 부위원장 황병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논설위원, 편집국장, 경영본부장 •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부위원장 송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 • 중앙일보 상무이사 •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감사 김철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실장
 감사 이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변호사

서울 제1중재부		서울 제2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중재부장 신 헌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이 우 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황 병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신문 논설위원, 편집국장, 경영본부장 •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 진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논설위원, 논설실장, 대기자 • 뉴스통신진흥회 비상임이사
 류 춘 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 • 한국소통학회 회장 • (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조 성 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공보관 • 한국소통학회 부회장 • (현) 코콤포터노밸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장
 권 정 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레신문 방송미디어부장 • (현) 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 • (현)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위원 	 양 소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 (현) 대한변협 공보이사 • (현) 변호사
 진 형 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사업본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현) 변호사 	 이 장 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대한변협 사무총장 • (현) 변호사

서울 제3중재부		서울 제4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이 동 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박 병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관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 경영기획실장 충청일보 편집국장 겸 상무이사 	 이 재 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언론학회 회장 (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 선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초지원 지원장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현) 변호사 	 양 승 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현)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심 미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MBC 편성국 전문연구위원 (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현)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 은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조정위원 (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황 용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현)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곽 란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동부지검, 부천지청, 천안지청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변호사

서울 제5중재부		서울 제6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중재부장 김형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정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창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국제부장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정책위원장 • (현) 국립대한민국인사정보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 	 장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iaweek 서울특파원 기자 • 한겨레신문 편집인 겸 전무 •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박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일보 논설위원 • JTBC 시청자·정책·심야실장 • (현) 호서대 시융합대학 교수 	 김철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실장
 김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부원장 • (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현) 변호사
 김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변협 대변인 • (현) 변호사 	 장윤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 방송사 보도국 기자 • (현) 변호사

서울 제7중재부		서울 제8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황 기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중재부장 박 미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 석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감사원 감사위원 • (현) 변호사 	 송 충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향신문 논설주간(상무이사) • 연합뉴스 TV 뉴스총괄부 전문위원
 박 태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프로듀서(EP), 제작위원 • KTV 방송제작부장 • (현) (재)세종문화회관 비상임이사 	 서 경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라디오본부장 •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 • 성공회대 외래교수
 안 승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 변호사 	 민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조교수 •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 (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강 소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헤럴드 기자 • (현)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최 승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현)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 (현) 변호사

부산중재부		대구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중재부장 전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 (현)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손현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지법 부장판사 • (현)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장병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신문 기자, 논설고문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 부산민주항쟁기념 사업회 부이사장 	 유영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일보 편집국장 • 동아대 강사
 김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MBC, 부산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 비서관 • (현) 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초빙교수 	 조성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 (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정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행정심판위원 • 부산가정법원 조정위원 • (현) 변호사 	 이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법 부장판사 겸 대법원 연구법관 • (현) 변호사
 이미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변호사 	 권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옴부즈맨 위원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연구회장 • (현) 대구카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광주중재부		대전중재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중재부장 박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지원장 • (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염원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윤석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방송학회 회장 •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송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 • 중앙일보 상무이사 •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조경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일보 기자, 편집국장 • 제1, 2회 서재필 언론인상 심사위원장 • (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승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 (현)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정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 한국방송학회장 • (현)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노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 • 충남경제발전전략위원회 위원 • (현) 호서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서애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남부지검 검사 • (현) 변호사 	 박주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변호사

경기중재부		강원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성명	주요 경력
 <p>중재부장 이 건 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법 부장판사 • (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p>중재부장 김 현 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지법 부장판사 • (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p>송 대 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일보 편집국부국장, 논설위원 • 스포츠동아 대표이사 발행인 	 <p>이 광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 (현) 강릉인문학연구소장
 <p>김 정 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 (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현) 변호사 	 <p>김 학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 한국헌법학회 회장 • (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장 미 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현) 변호사 	 <p>최 영 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 기자, YTN기자 • 전국지역언론학회 연합회장 • (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p>이 용 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 (현) 변호사

충북중재부		전북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중재부장 지영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현)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구창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지법 부장판사 (현)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영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일보 정치, 사회부장 새충청일보 대표이사 사장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김성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일보 기자, 편집부장, 논설위원 전북일보 기자, 편집국 총괄부국장
 정연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장 (현)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황선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변협 부협회장 (현) 변호사
 이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대전고검 검사 (현) 변호사 	 김선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남언론학회 회장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 (현)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류성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현) 변호사 	 정제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 변호사

경남중재부		제주중재부	
성명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중재부장 황영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법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지원장 • (현)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중재부장 김현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 (현) 제주지법 부장판사
 안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경언론학회 회장 • (현)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 (현)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고영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명예교수 • (사) 제주언론학회 회장 • (현) 제주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윤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일보 동아일보 기자 • (현) 부산오목어대 교양대학 교수 	 고창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민일보 논설위원 • (현) (주)제주풍력 상무
 조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 (현) 변호사 	 문윤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광고홍보학회 기획이사 •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 (현) 제주국제대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수
 김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 (현) 변호사 	 강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그룹 법무팀 • (현) 변호사

- 1996. 7. 1. 개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충남중재부를 대전중재부로 명칭 변경
 - 서울 제5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75인으로 증원
- 1999. 4. 9. 박영식 위원장(제9·10대) 취임
- 2000. 2.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3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01. 3.30.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2004. 4. 1. 상담 및 교육 전담 부서 신설
- 2005. 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기존의 조정제도 외에 중재제도 도입
 -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가능
 - 인터넷신문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2005. 3.31. 조준희 위원장(제11대) 취임
- 2005. 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5. 9. 2. 서울 제6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80명으로 증원
- 2006. 6.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언론중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합헌
 - 시정권고제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청구 각하
 -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가처분으로 하는 규정은 위헌
- 2007. 4.27. 위원회 새 CI 선포
- 2008. 4. 7. 권 성 위원장(제12·13대) 취임
- 2009. 2.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도 조정 및 중재대상에 포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정정보도청구등이 접수되는 경우 청구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제3자 시정권고 신청 제도 폐지
- 2009. 8. 7.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9. 9. 1. 서울 제7중재부 증설 및 중재위원 85명으로 증원
- 2010. 1.25.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외에 재·보궐 선거 시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 2011. 4.11. 창립 30주년 기념행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2014. 3.31. 서울 제8중재부 신설 및 중재위원 90명으로 증원
- 2014. 4.29. 박용상 위원장(제14대) 취임

- 2015. 7.30. 「공직선거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 2017. 1. 1. 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9호)
- 2017. 2. 8.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고결정문 도입 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재유형 다양화
- 2017. 8.28. 양인석 위원장(제15대) 취임
- 2018. 9.17. 이석형 위원장(제16대) 취임

4. 기구

가. 위원총회

- 구성 : 중재위원 90명
- 기능
 -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 사업실적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기본규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운영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9명
- 기능
 - 위원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처리
 - 위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
 -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선거기사심의위원 위촉 동의

다. 시정권고소위원회

- 구성 : 중재위원 7명
- 기능
 - 언론의 보도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
 - 시정권고 세부 기준 및 절차 제정

라. 중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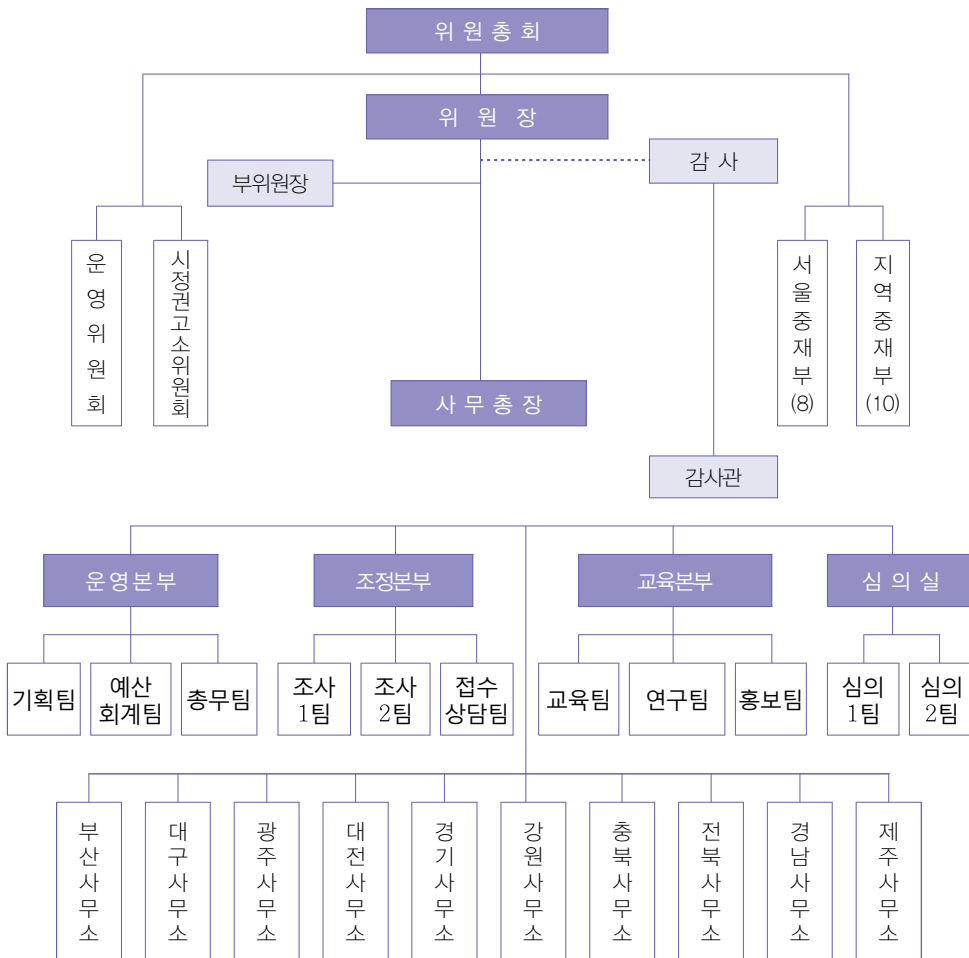
- 구성
 - 중재위원 5명
 - 전국 18개 중재부(서울 8개, 지역 10개)
- 기능
 - 조정·중재신청에 따라 조정·중재업무 처리

마. 사무처 인원 현황

(단위 : 명 / 2019년 12월 말 기준)

구 분	별정직	일반직	계
정 원	1	87	88
현 원	1	87	88

【위원회 기구표】



5. 2019년 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관리항목	내역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6,966	6,954	12
경상비	경상비	2,338	2,319	19
사업비	조정 및 심의사업	2,318	2,264	54
	조사 및 연구사업	330	311	19
	홍보 및 교육사업	352	345	7
	소계	3,000	2,920	80
합계		12,304	12,193	111

6. 제20대 국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현황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변재일 의원	2016. 9. 1. 의안번호 200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중재위원 추천권자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변협 회장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안 제7조제3항) - 중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안 제8조제2항) -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2조) - 중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 신설) -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안 제34조)
노웅래 의원	2016. 9. 5. 의안번호 20021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국회의장 및 언론인단체 등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 현행 중재위원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언론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 -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중재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함(안 제7조제10항) -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위원회 재원 충당에 언론진흥기금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추가하고, 국가의 필요경비 지원을 명문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중재위원회의 회계처리, 예산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서 제출에 대한 사안을 명문화(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곽상도 의원	2016. 10. 28. 의안번호 2002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정(안 제1조 및 제7조) -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신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p>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인격권피해자”라 함)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 등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 제33조에 따른 인격권 침해배제청구권 및 제33조의2에 따른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한 기사 댓글이나 조정·중재·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권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주호영 의원	2017. 4. 25. 의안번호 20068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 표시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안 제17조의2제1항) -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진실한 보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안 제33조 신설 등)
송희경 의원	2017. 8. 4. 의안번호 20083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안 제4조의4항 신설) -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도모(안 제33조 신설 등)
강효상 의원	2018. 5. 9. 의안번호 20134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짜뉴스 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 규정(안 제4조제4항 신설) - 고충처리인의 권고 수용 의무화(안 제6조제3항)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제34조제1항제1의2호 신설) -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언론사 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안 제33조 신설)하고, 언론사 등의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 마련(안 제34조제1항제5호 신설) -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에 가짜뉴스를 포함하고 청구기간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있는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안 제14조제1항)하며, 추후보도청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안 제17조제1항) -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표시의 의무를 강화(안 제17조의2제1항)하도록 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언론사 등에 가짜뉴스 보도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의 미이행 시 제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짜뉴스 보도 근절(안 제4조 제4항, 안 제33조 등)
백혜련 의원*	2018. 8. 3. 의안번호 20147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위원 결정사유 중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제4호)
박광운 의원	2018. 11. 29. 의안번호 2016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할 경우 프로그램의 시작 또는 지면의 첫 면(인터넷 매체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고(안 제15조제6항제1호~4호 신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신동근 의원	2019. 5. 21. 의안번호 2020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 백혜련 의원 발의안은 2018.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기결(언론사에 소속된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되어 2018. 12. 24. 공포(2019. 3. 25. 시행)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 내용
이상헌 의원	2019. 8. 8. 의안번호 2021901	-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변경(안 제19조제4항)
한선교 의원	2019. 10. 18. 의안번호 2022913	- 정정보도 등 청구기한을 현행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및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안 제14조제1항)
김영주 의원	2019. 10. 31. 의안번호 2023502	- 중재위원 정원을 현행 '40명 이상 90명 이내'에서 '120명'으로 확대(안 제7조제3항)

7. 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 내용

항목	질의 내용	질의의원
인터넷 상 권리침해적 보도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마련	인터넷 기반 매체의 특성상 권리침해적 보도는 정정보도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속 인터넷상에 남아 지속적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 마련 필요	김수민 의원 염동열 의원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언론사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	시정권고 결정을 했음에도 수정·삭제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언론보도가 많아 시정권고 결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책 마련 촉구	김재원 의원
인터넷 매체의 법익침해 보도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 대책 마련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선정적 기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권고 역시 사후적 조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	박인숙 의원
조정신청 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신속한 언론피해구제 위해 중재위원 증원, 사무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	조정신청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신속한 언론피해구제 위해 중재위원 증원을 통한 중재부 증설, 사무처 인력 증원 등을 위한 법 개정 및 예산 확보 노력 필요	염동열 의원

8. 2019년 주요 발간물 목록

연번	발간물	발행일	발행부수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편람	2019. 1. 31.	500부
2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편람	2019. 1. 31.	250부
3	알기 쉬운 선거기사 가이드북	2019. 1. 31.	500부
4	2018년도 연간보고서	2019. 2. 28.	300부
5	2018년도 시정권고 사례집	2019. 3. 29.	PDF / E-Book
6	계간 <언론중재> 봄호(제150호)	2019. 3. 30.	800부
7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2019. 5. 31.	PDF / E-Book
8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1호	2019. 6. 30.	650부
9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제151호)	2019. 6. 30.	800부
10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9. 7. 31.	1,000부
11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제152호)	2019. 9. 30.	800부
12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제3호)	2019. 11. 22.	200부
13	2019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 보고서	2019. 12. 20.	200부
14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2019. 12. 31.	650부
15	계간 <언론중재> 겨울호(제153호)	2019. 12. 31.	800부
16	언론  사람(월간 대외홍보지)	매월 1일	3,000부

이 책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 기술한 연간보고서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9 연간보고서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9 Annual Report

인쇄일 2020년 2월 25일
발행일 2020년 2월 28일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3114
팩스 02) 397-302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제작 (주)계문사 02)725-5216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